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1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1. 12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0/93
등록일: 2001년 12월 18일
기증:

대한민국정부

본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음.

목 차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	1
1. 목표 및 방향	1
2.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3
3. 2001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규모	11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정제도 개혁	16
1. 협동조합 개혁	16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22
3. 농수산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행정규제개혁	31
II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37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37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43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57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59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70
6. 친환경농업의 육성	80
7. 농어가 경영안정대책의 추진	88
8.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94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시책	102
1. 쌀산업	102
2. 채소·원예산업	104
3. 축산업	108
4. 임업	118
5. 수산업	134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39
1. 다양한 소득원 개발	139
2. 기초생활환경 개선	142
3. 교육여건 개선	147
4. 농어업인 연금제도 실시	150
5.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151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2001년은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농업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첨단지식·기술의 농업접목과 실용화로 농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라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작년,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듯 했으나 유가상승과 내부적인 구조조정의 지연 등으로 하반기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우리 농업도 시장개방과 수급불균형으로 과일,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생산비 절감과 첨단 영농기술의 확산 등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농업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WTO와 FT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시대적 조류속에서,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국민소득의 증가와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소비구조가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안전성·품질차별화·유통 및 가공방법의 다양화 등 비가격적 경쟁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생산에서도 대량생산과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에서 품질을 중요시하고 소비자의 요구(needs)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생산기능 외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다면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량안보·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및 지역사회의 유지·보호 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응한 농업분야의 상호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개방과 경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시장지향적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노동·자본이 핵심 생산요소였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기술이 핵심 생산요소로 중요시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부문도 정보화기술과 첨단생명공학을 생산·유통과정에 폭넓게 접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하에 2001년의 농정시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첫째,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곡자급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둘째,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위해, 농산물 수급균형과 가격안정대책을 중점 추진하면서, 논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가경영·소득안정시책을 시행할 것이다.

셋째, 농업에 생명공학(BT)과 정보산업(IT)을 접목, 21세기 생명공학의 선도산업, 첨단기술농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 신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확대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고 국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WTO와 한·칠레 FTA 등 농산물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아울러 농업분야의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임업은 반세기에 걸쳐 추진되어 온 산림계획에 의거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잘 가꾸어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사람과 숲이 상생·공존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어업인의 건전한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선, 자원수준에 적합하게 연근해 어선세력을 조정하는 한편, 어업인의 조직화와 의식개혁을 통한 자율관리 어업체제의 구축으로 어업인이 자원관리 및 생산량 증대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어촌·어항·어족자원의 관광자원화로 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수산물의 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와 운영합리화 및 수산물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수산물유통구조를 합리화 하겠으며 수산물검사 인력과 장비보강, 이에 따른 제도의 개선으로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발전 시책을 통해 어장의 축소와 자원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수산업이 중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가고자 한다.

2.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가. 농업·농촌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1) 농업·농촌 투융자 집행내역

2000 농업·농촌 투융자실적은 국고기준 6조 3,692억원,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집행실적은 8조 1,565억원이다.

<농업·농촌투융자 집행내역>

(단위 : 억원)

	45조계획	예 산	집행실적
- 계	69,576억 원	85,001	81,565
- 국 고	58,398	66,949	63,692
- 지방비	7,528	10,888	10,865
- 자부담	3,650	7,164	7,008

2000년 투융자 실적 국고기준 6조 3,692억원은 1단계('92~'98) 연평균 5조 1,226억 원보다 1조 2,466억 원 많고, 당초 2000년 투자계획 5조 8,398억 원보다 5,294억 원 많은 수준이다.

한편 농림부문예산은 '9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일반회계, 농특회계, 재특회계순기준으로)비중은 2000년에 국가예산의 8.4%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 추이>

(단위 : 천억 원)

연도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 국가전체(A)	365	420	495	582	667	740	835	909	978
• 농림예산(B)	30	44	56	76	79	80	78	78	82
• B/A(%)	8.3	10.4	11.4	13.1	11.9	10.8	9.3	8.6	8.4

재원별로 분석하면, 1단계('92~'98) 투융자실적의 자부담 비율이 14%였으나 2단계의 2000년 실적은 9%로 감소한 반면, 국고지원 비율은 75%에서 78%로 지방비 지원비율은 11%에서 13%로 각각 증가하였다.

	42조원투융자실적('92~'98)	45조원 투융자(2000)
- 국고	394,866(75%)억원	63,692(78%)
- 지방비	57,693 (11%)	10,865(13%)
- 자부담	70,716 (14%)	7,008 (9%)
계	523,275(100%)	81,565(100%)

또한, 1단계의 국고지원 중 예산비중이 88%였으나 2단계의 2000년 실적은 84%로 줄어든 반면, 기금(농지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의 비중은 12%에서 16%로 증가하였다.

	42조원('92~'98)	45조원(2000)
- 예산	347,981(88%)억원	53,467(84%)
- 기금	46,885(12%)	10,225(16%)
계	394,866(100%)	63,692(100%)

성질별로 보면 42조원 국고지원중 융자비율은 44%였으나, SOC 등 정부보조사업 증가로 2000년 45조원사업의 융자비율은 29%로 감소하였다.

	42조원('92~'98)	45조원(2000)
- 보조	220,218(56%)억원	45,000(71%)
- 융자	178,648(44%)	18,692(29%)
계	394,866(100%)	63,692(100%)

지원대상자별로 보면 1단계사업에서는 국고지원중 농업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40%였으나 보조의 융자전환에 따라 2000년 농업인 지원 비중은 18%로 22%포인트 감소한 반면, SOC 등 정부사업 비중은 증가하였다.

	42조원('92~'98)		45조원(2000)
- 농업인	160,206(40%)억원	→	11,513(18%)
- 생산자단체등	42,132(11%)	→	7,329(12%)
- 정부사업	40,287(10%)	→	19,221(30%)
- SOC 사업	152,241(39%)	→	25,629(40%)
계	394,866(100%)	→	63,692(100%)

기능별로 분석하면 국고 투융자실적 6조 3,692억원 중 영농기반정비등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에 2조2,420억원(35%), 농업인경영안정지원 1조1,497억원(18%),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1조 254억원(16%), 농업경영종합 자금등 경영체 육성 9,857억원(16%)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6,646억원(10%), 농림업부가가치제고에 3,018억원(5%) 순으로 집행되었으며, 농림업 공익적 기능확충,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및 유통개혁 분야에 중점 투자되었다.

품목별로 분석하면 42조원사업(어업제외)에 비해 원예특작, 축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투융자 비중은 줄어든 반면, 생산기반 정비, 기술개발, 직불제, 생활환경개선 등 품목 공동 투융자 지원 비중은 증가하였다

	42조원('92~'98)		45조원(2000)
- 쌀	130,637(36%)억원	→	22,426(35%)
- 원예 특작	14,826(4%)	→	1,509(2%)
- 축산	39,946(11%)	→	5,106(8%)
- 임업	23,548(7%)	→	2,848(5%)
- 기타	149,906(42%)	→	31,803(50%)
계	358,863(100%)	→	63,692(100%)

(2) 제1단계('92~'98) 투융자계획과 비교

2000년 농업·농촌 투융자는 1단계사업('92~'98)에 비해 자부담과 융자 비중이 줄고, 농업인 및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축소 및 융자전환으로 농업인에 대한 책임경영의식을 고취하고 친환경 농업육성, 기술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중점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1단계 투융자계획과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비교 >

	제1단계('92~'98)	농업·농촌투융자('99~2004)
▪ 중점지원분야	○ 경지정리, 농기계, 유리온실 등 - 주로 하드웨어중심의 물적 기반 확충	○ 유통개혁, 수출촉진, 농가 경영개선, 친환경농업육성 등 - 주로 소프트웨어중심의 지원 * 재해대비 기반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상습적인 기상이변에 대비
▪ 개별경영체지원	○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지원 중점	○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융자지원으로 전환
▪ 자금지원방식	○ 공급자 위주의 사업자 관리	○ 수요자 위주의 「농업경영 종합자금제」 도입
▪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의 운영 및 사후관리 미흡	○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집행 및 관리

(3) 투융자 효율성 제고 방안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생산기반정비, 시설 및 장비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SOC성격의 하드웨어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 확충, 품목별 경쟁력 확보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이나 유통개선, 환경,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일부 비효율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서는 이러한 부실과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방식과 집행체계,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농업인·생산자단체 등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지속적·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은 SOC성격, 친환경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국한하고, 농업인·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융자로 전환하여 농업인 등 개별경영체의 자생력제고와 책임의식을 고양시켜 나가고 있다.

보조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의존의식을 심화시키고 과잉수요를 유발시켜 자금관리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사업을 하는 수요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출취급기관에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2000년부터 본격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품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계획과 사업능력에 따른 자금지원체계를 만들고 기술·경영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인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의 성격·지원조건 등 유사기능을 가진 사업은 통합 및 그룹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투융자사업 집행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실, 비효율문제가 우려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농림부 소속 3~5급 공무원 180명으로 전국 138개 농촌 시·군별로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각각 일선 시·군의 농림사업집행과 관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함과 아울러 현장의 애로사항을 농정에 반영하는 등 평가와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분야별 재원별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단위:억원)

	총투융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 타
합 계	450,526	378,384	47,169	24,973
1.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발전	149,663	130,593	15,290	3,780
○ 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정비	50,884	50,854	300	-
○ 농지의 정비 및 관리	62,103	53,336	8,767	-
○ 친환경 농림업의 육성	14,312	11,795	1,859	658
○ 산림자원의 확충	22,364	14,878	4364	3,122
2. 건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77,811	71,927	1,986	3,898
○ 교육 및 훈련	9,080	8,936	144	-
○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지원	45,628	45,468	160	-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103	17,523	1,682	3,898
3.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지원	18,063	15,842	1,579	642
○ 첨단 농림업기술 개발	14,449	12,556	1,578	315
○ 농림업의 정보화 지원	1,057	947	-	110
○ 농림업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2,557	2,339	1	217
4.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87,142	67,959	5,118	14,065
○ 산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48,826	37,733	351	10,742
○ 소비자 유통기반 조성 지원	11,211	7,283	3,071	857
○ 물류체계, 정보·교육 지원	5,311	4,749	161	401
○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원	1,169	838	-	331
○ 소비자보호의 강화	2,365	1,981	360	24
○ 축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6,628	6,346	33	249
○ 임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4,169	2,850	282	1,037
○ 농림수산물수출기반 조성 지원	7,463	6,179	860	424
5.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의 증진	81,304	55,520	23,196	2,588
○ 농촌의 다양한 산업 유치	19,965	13,290	5,009	1,666
○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41,404	26,741	14,663	-
○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19,935	15,489	3,524	922
6.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36,543	36,543	-	-
○ 농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지원	26,488	26,488	-	-
○ 농업인의 부담경감 지원	10,055	10,055	-	-

나. 수산업 · 어촌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1) 2000 수산업 · 어촌 투융자 집행내역

2000 수산업 · 어촌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8,223억원이며 이는 수산진흥종합대책상의 당초계획보다 552억원 적게 집행되었으며, '99년에 비해서도 274억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산부문의 예산이 재정형편상 대폭 증액이 어려웠고 또한,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산물 유통시설사업의 시설부진에 따라 이월 및 불용액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1단계('92~'98) 농어촌 투융자 집행실적의 연평균 5,361억원에 비해서는 2,225억원이 증가하였다.

기능별로 보면 어업인의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1,962억원(23.9%), 어항시설등 기반시설 조성 1,869억(22.7%),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2,007억원(24.4%), 수산물유통구조 개선759억원(9.2%) 양식어장개발 등 기르는어업 육성 803억원(9.8%), 수산개발 기타 823억원 (10.0%)으로 집행되었으며 한계에 이른 잡는 어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르는 어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한일 어업협정 체결 등에 따른 어장의 축소로 어려운 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에 밀려 투자가 미흡한 상태이다.

(2)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

수산사업실시요령을 개정하여 수산사업의 평가·사후관리 및 환류체계를 보강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및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성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되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업이나 평가체계가 구축되지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토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수산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2001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규모

가. 2001년도 농림예산 편성방향

2001년도 농림예산은 IMF로 인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부채상환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융자를 강화하고, 농업관련조직의 2단계개혁의 추진을 뒷받침하며, 매년 반복되는 재해예방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농업기술개발 및 농업·농촌정보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첫째,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당면한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지원, 농수산업경영개선 조성자금, 연대보증 피해농업인의 지원 등을 위한 부채대책예산을 반영하였다.

한편, 주곡인 쌀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구축과 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사과·배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둘째, 협동조합 중앙회 합병에 따른 전산통합비용과 일선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자금을 반영하였으며, 물관리 3개기관을 통합하여 2000. 1월에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제2단계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일관된 농업용수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유지관리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조기경영안정을 이루도록 하였다.

셋째, 농산물의 유통개선부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유통의 하드웨어(시설) 부문은 신규투자를 줄이는 한편, 농업관측사업, 유통활성화사업 및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사업 등 소프트웨어(운영) 중심의 투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도록 예산을 반영하였다.

넷째, 가뭄과 호우 등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용수개발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는 한편, 농업용수의 과학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기술개발예산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각종 농업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보화촉진기금에 7만명의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

한편, 개방시대에 우리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 해외시장개척,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등 수출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나. 2001년도 농림예산 규모

2001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총 8조 8,100억원으로 2000년도 보다 5.3% 증가되었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차예산 포함) >

(단위: 억원)

구 분		2000예산 (A)	2001예산 (B)	증△감 (B-A)	%
기 능 별	○생 산 기 반 조 성	21,340	21,908	568	2.7
	○농 업 기 계 화	2,390	2,623	233	9.7
	○생 산 및 유통 개선	13,646	10,834	△2,812	△20.6
	○기술개발 및 정보화	1,921	2,250	329	17.1
	○인 력 육 성	3,024	2,855	△169	△5.6
	○농촌소득원개발 등	2,631	2,743	112	4.3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26,971	32,649	5,678	21.1
	○양 곡 지 원	7,215	7,813	598	2.2
	○공 공 근 로 사 업	1,695	1,239	△456	△26.9
	○기 본 적 경 비	2,816	3,186	370	13.1
합 계		83,649	88,100	4,451	5.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포함)		(87,909)	(92,777)	(4,868)	(5.5)
재 원 별	○일 반 회 계	26,676	24,758	△1,918	△7.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3,631	59,349	5,718	10.7
	○재정융자특별회계	2,020	1,327	△693	△34.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25	1,315	90	7.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7	1,351	1,254	1,292.8
양 곡 관 리 특 별 회 계		12,167	11,586	△581	△4.8
농 특 세 관 리 특 별 회 계		517	2,162	1,645	318.2

※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기준.

< 2001년 농림예산 사업별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000예산 (A)	2001예산 (B)	증△감 (B-A)	%
1. 생산 기반 조성	21,340	21,908	568	2.7
2. 농업 기계화	2,390	2,623	233	9.7
3. 생산 및 유통 개선	13,646	10,834	△2,812	△20.6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1,921	2,250	329	17.1
5. 인 력 육 성	3,024	2,855	△169	△5.6
6. 농촌소득원개발등	2,631	2,743	112	4.3
○ 농촌소득원개발등	1,304	1,581	277	21.2
○ 생활환경 개선	968	874	△94	△9.7
○ 기 타 사 업	359	288	△71	△19.8
7.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26,971	32,649	5,678	21.1
○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9,383	11,071	1,688	18.0
○ 채 무 상 환	15,778	20,498	4,720	29.9
○ 비료계정 적자보전	1,810	1,080	△730	△40.3
8. 양 곡 지 원	7,215	7,813	598	8.3
○ 수 매 지 원	2,066	3,571	1,505	72.8
○ 양 곡 증 권 기 금	5,149	4,242	△907	△17.6
9. 공 공 근 로 사 업	1,695	1,239	△456	△26.9
10. 기 본 적 경 비	2,816	3,186	370	13.1
합 계	83,649	88,100	4,451	5.3

다. 2001년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01년도 수산분야 예산편성은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여

첫째, 어업의 구조조정과 관리형 어업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둘째,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다기능 어촌정주환경의 조성을 위한 어촌기반에 주력하는 한편,

셋째,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시설의 현대화에 예산의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단위 : 억원)

		2000예산 (A)	2001예산 (B)	증감 (B-A)	%
기 능 별	○ 수산분야 지원	8,013	9,312	1,299	
	어업구조정 및 어선설비	954	2,619	1,665	
	관리형 어업육성	1,217	900	△317	
	어업인 육성, 경영지원	2,475	2,582	107	
	어촌기반시설	1,893	2,046	153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1,280	952	△328	
	수산연구시설	194	213	19	
계		8,013	9,312	1,299	
재 원 별	일 반 회 계	298,474	2,975	△10	
	농 특 회 계	459,703	5,751	1,154	
	재 특 회 계	43,100	477	46	
	책 특 회 계	-	109	109	

Ⅱ.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정제도 개혁

1. 협동조합 개혁

가. 협동조합 2단계개혁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통합직후인 2000.10.9일 공동으로 제2단계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2001년부터 협동조합 2단계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중앙회의 경제사업장은 회원조합에 이관하거나 자회사화하고, 중복 금융점포폐쇄 및 중복고정자산 매각, 잉여인력 구조조정, 조직축소 등 중앙회의 슬림화와 함께 대표이사별 경영협약제, 인사권확립 등 대표이사별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통합 등 농·축산물 통합유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앙회를 일선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2001.3.16일 농협중앙회 내에 학계, 농민단체, 협동조합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협동조합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중앙회

2000.7.1일 통합이후 2001.9월말현재 인력 899명 감축, 중복금융점포 64개소 폐쇄, 양재동 사옥 등 43건 중복고정자산 2,633억원 매각, 중앙회조직 축소(통합전 48부4처5분사 → 통합후 33부1처1분사),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경영성과에 따른 대표이사별 성과급제 도입 등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이사회와 대표이사간 경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산물공판장 13개소 및 축산물공판장 4개소도 각각 중앙회내의 단일 분사화하고, 전국의 포장육 가공사업소 정비, 수도권 축산물판매장의 (주)농협축산유통통합 등 중앙회 경제사업장도 정비하였다.

아울러, (주)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등 개별 자회사와 사내분사 형태로 운영중인 종합유통센터도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농협유통을 중심으로 통합물류·조직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6.30일 (주)부산경남유통과 (주)충북유통의 농협중앙회 지분을 (주)농협유통으로 양도하여 (주)농협유통을 지주회사 형태로 하여 농산물 물류통합과 함께 단계적인 조직통합을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중앙회소속 유가공공장, 사료공장 등은 회원조합사업과 경합관계에 있게됨에 따라 경합관계를 배제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회원조합이관 또는 중앙회와 조합의 공동출자 자회사화를 추진중이다.

이러한 강도높은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통합 이후 신용사업 경영건전성 지표인 BIS비율도 2000말에 10.20%로 통합전의 9.12%보다 크게 증가하고, 2000말 당기순이익도 1,95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통합 이후 신인도 증가로 예수금이 14조원이나 증가하여 2001.8월 말 현재 중앙회의 예수금은 75조원을 기록하였다.

(2) 일선회원조합

지난해 2001.7.1일 통합이후 9월말 현재 중복지사사무소 130개 폐쇄, 인력 3,159명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운영평가자문회의(282개조합), 사외이사제(81), 상임이사제(55)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지난해 농림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209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사 결과 169개 조합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조합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부실액은 7,092억원으로 밝혀졌다.

이들 169개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정상화·합병·청산대상으로 구분하여 2002년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정리방안을 마련중이다.

다.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정

조합부실예방 및 조기 부실정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김영진 의원외 40인, 신경식 의원외 16인(찬성자 59인)등 여·야의원 발의로 2001.6월에 각각 제 222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이 상임위 대체토론(6.27), 법안소위 공청회(7.19) 및 상임위 의결(8.24), 법제사법위원회 의결(8.28)을 거쳐 9.1일 제225회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에 이송되어 9.12일 공포되었다.

<농협구조개선법률의 주요내용>

- 농림부장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 조합을 결정
 - 부실조합은 재산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
 - 부실우려조합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합
- 적기시정조치를 제도화하여 조합부실의 사전예방 및 조기정리
 - 경영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경영상태별로 경영개선 권고, 요구 또는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실시
 -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구조조정, 조합임직원 문책, 증자,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임
-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해 행정처분
 - 행정처분에는 임원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사업의 정지, 계약이전, 설립인가 취소 등이 포함
- 현행 농협법상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확대·개편하여 보호대상과 기능을 확대
 - 기금의 용도에 예금대지급 외에 부실조합정비를 위한 자금지원 등을 추가하여 부실조합정리를 촉진
 - 기금의 재원에 보험료, 정부·농협중앙회의 출연금,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하여 재원을 확대
- 농협자산관리회사설립 및 운영근거 마련
 -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조합과 중앙회로부터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대시킨 후 정리

라. 농업금융개혁

지난해 11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개혁내용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농업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을 확정·발표(4.18)하여

농업금융의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 대 농업인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한 농업 금융개혁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농업금융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선조합 상호금융 분야와 관련, 상호금융대출금리는 '00.말 현재 10.72%이던 것이 '01.9월 현재 8.97%로 $\Delta 1.75\%P$ 인하되었다. 그동안 상호 금융 금리인하를 위해 대출 약정기간 경과시 최고 1%까지 가산되는 기간가 산금리제를 폐지하였고, 고금리 운용조합을 특별지도하여 대출금리가 12% 이상인 고금리조합은 금년말까지 일소할 계획으로 있다.

둘째, 정책금융 및 농신보제도개선부문에서는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용자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금리체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시중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관광농원개발 등 16개사업의 금리를 8%에서 5.5%로 조정하는 등 총 18개사업의 정책자금 용자금리를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농신보의 보증여력확충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농신보 운용배수를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하였으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여 1억원 초과 개인보증시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폐지하였다.

셋째, 농협중앙회는 자기자본확충을 위하여 중앙회 출자금증대, 이익잉여금 증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임직원 우선출자를 통하여 546억원의 출자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기반구축을 신용사업부문의 인력양성, 생산성, 수익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IT(정보기술)투자강화, 국내·외 금융기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에 있다.

마. 수협개혁 추진방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과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수협이 어업인의 자조조직이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2000. 1월과 12월에 1·2차 수협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01. 4. 26에는 11,095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을 2001. 2월 마무리하여 인력 39%(1,165명) 감축, 부서 16개(28→12개) 축소, 9개 도지회 전면폐지, 자회사 정비 등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2001. 5월에는 「뉴스타트 수협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흑자경영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어업환경 악화와 IMF이후 건전성 기준강화 등으로 경영이 부실하게 된 회원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해 2000. 9월 부실조합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감축, 부실사업장 폐쇄, 고정자산 매각, 부실채권 감축 등 구조조정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무이자 경영개선자금도 지원(2000 : 535, 2001 : 435억원)하고 있다.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물유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 시설이 확충되어 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율과 공동출하율이 증가되고 선진적인 거래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유통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시장의 변화와 농산물 수급불안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의 준비태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유통경로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증가, 소비의 고급화·다양화, 농산물의 과잉공급기조 등 농산물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유통개혁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농업관측 대상품목을 2000년 18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늘리고, 관측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 농가를 440호에서 1,000호로 확대하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해 오던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시설채소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최저보장가격제 대상품목을 2000년 10개 품목에서 2001년에는 12개 품목으로 늘리고, 최저보장가격 산정기준도 경영비 수준에서 정해 오던 것을 최고 직접생산비 수준까지 인상하여 가격폭락시에도 수급안정정책 참여농가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과실에 대해서도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대응력을 높임으로써 과실류의 수급안정을 기하고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계약 출하사업을 2001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대상품목과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출하사업 참여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과실수급안정을 위한 핵심제도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2) 협동조합중심의 규격농산물 출하체계 구축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표준규격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지 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영농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의 조직화 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유통참여가 어렵고 농협도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산지유통의 활성화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일선조합이 생산단계부터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산지유통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협동조합유통활성화자금 지원을 계속 확대(2001년 2,500억원→2002계획 4,000억원)해나감으로써 일선 조합의 경제·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지유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채소생산량의 11% 수준을 계약재배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등을 위해 자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하고, 조성액에 대응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원후 평가를 통해 잘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7,440백만원 추가지원)을 하고, 미흡조직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2,470백만원 회수)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산지유통센터(포장센터)를 2004년까지 248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60개소,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하여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해가고 있다.

(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여 생산자·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목표아래 정부는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2001년중 상설직거래장터 50개소를 운영하고, 중소 도시에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파머스마켓(농민시장) 19개소를 지원하여 그중 13개소를 개장·운영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할인점 등 민간대형유통업체와 농업인, 산지유통센터·종합유통센터 등과의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이들 업체에게 직거래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소비지 유통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거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협동조합과 산지 생산자단체와 연계, 농산물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물류시설비 및 직거래자금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거래를 통해 2000년 5조5,400억원에서 2001년에는 8조원으로 농산물직거래를 확대하고, 직거래 비중도 18%에서 24%로 늘려나갈 것이다.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그 동안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예약주문거래로 유통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00년까지 7개소를 개장하였으며, 2001년 중 2개소를 추가 개장하였다. 종합유통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선진유통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운영중인 종합유통센터는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개장 3년차인 '00년도에 1조6,12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농산물전용 판매시설로 정착되어 생산자 수취가격제고 및 소비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유통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산지 생산자조직을 종합유통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할인점·판매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판매가맹점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매취자금을 지원(2001년 300억원)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5)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및 도매시장의 운영방식 개선

종합유통센터가 개장되고 직거래가 활성화되더라도 농산물의 대부분은 도매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정상화는 유통개선대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시설여건· 거래액 등을 감안하여 지방, 신설도매시장 중심으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당분간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를 의무화하여 기준가격 형성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을 경유하더라도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출하자의 부담이 경감 되도록 하역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중도매인의 진·출입 확대로 경매참여의 경쟁 촉진으로 도매단계에서의 유통비용도 줄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불법행위 단속강화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중인 전자경매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매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출하주 등록제와 출하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가격등락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유통효율화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저가로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99년 농산물 물류비 6조 6천억원은 국가전체 물류비의 8.3%에 달하며 국가전체 GDP대비 농업GDP 비중(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엽채류와 같이 부피가 크고, 부패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인력에 의해 상·하차되는 농산물의 경우 물류비가 높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농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고, 판로도 확보할 수 있다.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농산물이 포장 및 파렛트로 적재되어 출하되고, 소비지에서의 하역기계화 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고 있다.

우선,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내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인상을 추진하는 등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농산물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이상이 되고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농산물의 포장출하율이 향상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하역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기계화장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99년부터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보조50%, 융자30%)하여 지원하고 있다.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식생활 보장

농산물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와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와 원산지관리를 강화하고, 새로 도입된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조사 건수를 '00년도 43천건에서 '01년도에는 54천건으로 확대하고, 조사항목도 2개 항목(잔류농약, 아플라톡신)에서 중금속을 추가하여

3개항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안전성조사결과 고지사항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성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또한,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관리해 오던 친환경농산물 표시 신고제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해오던 유기·무농약·저농약재배조건의 품질인증제를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친환경 안전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확대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의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WTO체제 출범 이후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등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과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 생산, 유통, 소비량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도록 권역별 임산물 유통시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총112개소(임산물직매장 95, 목재집하장 17)의 임산물 유통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였다.

2001년도에는 출하조절 및 생산자 소득제고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48개소를 지원하고,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임산물생산자 직판장시설 2개소를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설치하여 산지 유통시설과 소비지 유통시설을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산지에서 소량·분산 생산되는 임산물을 대단위 권역별로 수집·저장·선별·가공·포장 등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생산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97년도에 준공한 여주임산물종합유통센터에 이어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 동해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99년부터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시설 중에 있다.

또한, 밤, 대추, 표고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한 시장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경쟁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지역 특산물을 개발토록 60개 주산단지 중심으로 품목별 기초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는 출하조절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산자조직 단위로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97년도에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98년 6월부터 농림수산유통정보센터 및 산림청 정보망을 통하여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생산량, 가격, 수·출입 동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한 임업인과 소비자를 위하여 '99년 33개 산림조합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00년 8월부터 임산물전자상거래 전문사이트인 “푸른장터”를 개설하여 임산물전자상거래 시장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부터 2005년까지 임업인 1,000명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의 효율성 및 상품성 제고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임산물 15개 품목에 대한 표준출하규격을 제정·고시하고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출하하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포장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으로 브랜드화된 임산물의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다.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수산물은 강한 변질성과 저가 다량 품목으로서 근본적으로 유통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구조개선이 필요하여 1999년부터 수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수많은 유통개선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거래형태가 농안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거래형태를 일시에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품목과 시장을 제한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즉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패류 품목에 대하여 가락 및 노량진 양대 수산물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경매제 도입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생산 어민의 직출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대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을 중심으로 직거래 확대를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통체계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셋째,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확대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이미 47개 산지 수협에 대한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가락시장에 수산물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광주농수산물도매시장, 산지 수협외 위판장, 산지종합처리시설 등 앞으로 늘어날 유통시설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3. 농수산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행정규제개혁

가. 농정추진조직개편

(1) 한국마사회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2001. 1.29 부총리제 신설, 교육부의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 여성부 신설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수정안이 추가되어 통과됨으로써 한국마사회 업무가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 제6400호, 2001. 1.29)>

(2) 인천국제공항개항에 따른 동·식물검역조직 보강

2001. 3.29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기관이전 및 인력확충 등 검역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에 대한 조직을 개편하였다.<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170호, 2001. 3.27),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382호, 2001, 3.29)>

현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지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검역 인력 11인을 증원하였으며, 서울지소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여 인천공항지소로 하고, 검역인력 18인을 증원하였으며, 서울지소의 관할이던 서울 특별시·강원도 등을 중부지소 관할로 변경하여 종전의 서울지소 소속의 출장소(서울세관·서울국제우체국·동해)를 모두 중부지소로 이관하였다. 한편, 광양항이 동북아무역 중심항으로 부상하여 검역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검역관이 여수에서 광양까지 원거리(80km)를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관운영에 불편이 있어 여수출장소를 광양시로 이전하여 광양출장소로 변경하였다.

(3) 조직·인사 전담기구 신설 및 검역조직 보강 등

농림부는 조직 및 인사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인사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WTO체제 출범이후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전염성 가축질병이 빈발하여 외래 가축질병의 유입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2001년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식물검역 및 방역기능과 농산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기구 및 인력 보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조직개편을 위하여 직제개정안을 2001. 6.28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관리실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 조직인사담당관을 신설, 농촌정비과를 농촌진흥과로 변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험연구소 시험과 및 연구과를 시험조사과 및 안전성분석과로 변경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업무를 전담하는 검정과를 신설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관리·조사인력 등 보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본원에 질병방역부와 역학조사과·정밀진단과 신설, 서울·부산·인천지원에 과조직 신설, 평택출장소·속초출장소·광양출장소 신설 및 검역인력 보강
- 국립식물검역소의 본소에 소독관리과·병균조사과 및 해충조사과를 위협평가과·방제과 및 조사연구과로 개편, 인천공항지소·중부지소 및 영남지소에 과조직 신설, 서울·속초·평택출장소 신설 및 검역인력 보강
- 국립종자관리소의 정보화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4) 산 립 청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 행정기관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산림청 소속기관인 임업연구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직제를 개정하고 2001. 1. 1부터 동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식물자원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고유 식물자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광릉숲 보전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의 2002년도 소요정원을 요청하여 1과(생물표본과) 증설 및 소요인력 15명(연구관5, 연구사10) 증원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5개 지방산림관리청장(4급→3급) 및 25개 국유림관리소장(5급→4급)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직제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강원 동해안 및 경북, 충남·북 지역의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기 위한 「안동·강릉·진천」 격납고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항공관리소 「안동·강릉·진천지소」 신설 및 산림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전담할 안전요원 증원을 위하여 직제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나. 농림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1) 주요추진사항

'99년도에 잔존규제를 발굴하여 38건을 정비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행정의 안정성을 감안, 기존규제의 전면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신지식 신기술 사회의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중점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키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업인과 직접 관련되는 현장중심의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다

그 주요 정비내용은

- 농업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4건을 완화하고,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13건, 민원첨부서류 26건 44종을 감축하였으며
- 주문용 사료첨가제를 축산농가, 협업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폐지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매년 실시하는 축산물취급영업자의 위생교육을 신규영업자만 실시토록 개선하였으며
- 기타 실제 농업인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농업관련 규제개선을 통하여 농지취득 가격증명 신청절차, 생물학적 방제용 동물수입제도 등 6건을 개선하였다.
- 또한, 고시, 예규, 훈령 등 하위규정에 대한 규제 81건을 발굴·심사하여 28건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규제라고 느끼는 준공공기관의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정 87건을 발굴·심사하여 47건을 정비하는 한편,
- 국민의 고충을 상시 접수하고 이를 검토 처리 할 수 있도록 2000. 6월부터 농림부홈페이지에 「규제개선코너」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2001 주요 규제개혁추진 개혁

2001년도에는 지식정보화사회 및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새로운 체제마련 및 일선기관, 정부관련 법인·단체의 국민생활 불편문제를 집중 정비하여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시킴에 따라 농업관련산업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경쟁력향상 및 전년도에 이어 하위규정과 유사규정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림부 홈페이지에 그동안의 규제개선사항을 등재하여 국민에게 전자적 정보공개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및 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산 립 분 야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민간자율성이 필요하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산림경영의 자율성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도록 산림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2000년도에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산림부분 규제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도록 산림법시행규칙과 임산물 매각규칙을 개정하여 임산물의 굴취·채취요건 완화와 국유임산물 매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하였다.

2001년도 추진사항으로서

첫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대상을 확대하여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요건(산림법시행규칙 제60조 개정)에 보전임지를 일시 전용할 수 있는 대상을 삽입하여 국유림에 둘러싸인 사유림에서 벌채한 산물의 운반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벌채기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개정 완료하였으며,

둘째,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으로서 부정임산물 관련 차량·선박등에 대한 처분요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인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 산림병해충 구제·예방 조치권을 시·도, 시·군·구 공동권한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셋째, 산지의 보존 및 이용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으로서 현재 산지전용관련 4종의 인·허가 체제를 2종으로 통합정비하고 인·허가의 허가권을 규모별로 하부위임하고, 산림전용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전용을 허가하기 전에 생태·토질·경사, 재해위험 등을 검토·평가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며, 무분별한 채광·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방지를 위해 채광용 형질변경허가 기준 및 채석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채석업 등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다. 수산분야

2001년도의 해양수산 규제개혁 중점추진은 해양수산업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로 민간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향상과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업법, 수산물검사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법령을 통합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2001. 1.29)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하위규정규제 및 유사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규제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확대를 위한 유사행정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도모, 현장중심·국민중심으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사이버(Cyber) 규제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는 등 규제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잔여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제신설시 규제영향분석의 철저한 검증으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며, 특히 2002년도에는 현장을 통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규제업무를 추진코자 한다.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가. 배 경

WTO체제 출범과 농산물시장개방으로 농어업분야에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농어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 추세로 전문기술농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 인력육성이 시급하게 되었다.

특히, 농어촌 노동력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성 향상 둔화, 농어촌사회의 활력 감퇴 등 산업간·도농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내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기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급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갖춘 농어업전문인력 육성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방향

가족노동력에 바탕을 둔 개별경영체와 농업조직에 바탕을 둔 법인경영체로 구분하여, 개별경영체는 후계자,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법인경영체는 농업생산 및 이와 관련된 저장·가공·유통 등 2·3차 산업기능을 포함하는 Agribusiness의 중심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계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도 확대·개편하여 농업인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업경영 혁신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농업인 스스로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기술컨설팅을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경영모델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경영체의 발전수준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다. 농업인력 육성시책

(1)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지난 '81년부터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까지 총 114,524명의 후계농업인을 선정하여 19,016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

2000년도에는 4,674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50백만원씩 총1,500억원을 개인별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81~'96	'97	'98	'99	2000	합 계
○ 인원(명)	88,643	8,526	8,789	5,426	4,674	114,524
○ 지원자금(억원)	11,346	2,271	2,400	1,500	1,500	19,016

(2) 법인경영체 지원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의 대행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소규모 농가들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제도를 도입하여 농기업운영자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 현재 7,653개소(영농조합법인 5,986개소, 농업회사법인 1,667개소)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법인의 난립 및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 회생불가능 법인에 대한 퇴출 유도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3) 농업교육의 내실화

새천년 지식기반사회와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00년도에는 2,438백만원을 지원하여 63,658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체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교육수요자인 농업인의 실질적인 교육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대상자 설문조사, PC통신등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운영하였고, 농업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지식인 성공사례』, 경영교육, 정보화, 환경농업 교육 등을 15시간이상 농업인 교육과정에는 의무화하였다.

교육기관간 중복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국가 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 회계·경영반 등을 개설하여 농업인이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4) 농업경영혁신 추진

농업구조개선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투자효과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농업인의 경영혁신노력을 측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중심이되어 2000년도에는 60개의 표준진단표를 개발, 보급하였다.

농업인들이 표준진단표 작성을 통해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진단결과를 다른 농가와 비교해 보아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 개선해 나갈수가 있다.

또한, 보다 고급경영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컨설팅지원사업을 '99년 156개, 2000년도에는 379개 농가에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4,000백만원을 지원하여 400개 농가에 대해 우수한 민간컨설팅능력을 농가와 적시에 연계시켜 기술, 경영 등 종합컨설팅을 실시하므로써 우리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한 단계 진보시켜 나갈 계획이다.

(5)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0년에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의 후속절차로 2001년부터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일환으로 중견여성농업경영인반과 초급여성농업경영인반을 개설하여 2000년에 86명을 교육했으며,

2001년은 각 2회씩 실시하여 여성농업인 173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후계여성농업인은 2000년에는 859명을 선정하는데 이어 2001년에는 462명을 선정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2000년 731명의 농가도우미를 이용했으며, 2001년에는 1,667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과제는 2000년 3과제를 연구한 바 있고, 2001년에는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성 분석 연구, 농업·농촌발전과 여성 전문인력육성 교재개발 및 여성농업인 취업유형별 소득전망등 3과제를 연구 중에 있다.

라. 어업인력 육성시책

(1)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지난 '81년부터 농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까지 총 11,771명의 어업인후계자를 선정, 1,920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88년부터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왔으나,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92년부터 매년 어업인후계자를 1천명씩 지속적으로 선정·육성하여 전업어가·선도어업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547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50백만원씩 총 143억원을 개인별 영어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분	'81~'96	'97	'98	'99	'00	합계
○인 원(명)	8,762	848	927	608	626	11,771
○자금(억원)	1,119	229	254	159	159	1,920

(2) 전업어가 육성지원

우리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어를 확보할 목적으로 '92년부터 전업어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전업어가가 되고자 신청한 분야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최근 3년 이상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가 55세이하인 어가를 전업어가 대상자로 선발하여 2004년까지 3,844호를 전업어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00년까지 1,639호의 전업어를 선정하여 8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에도 151호에 75억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어업경영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선도어업경영체 육성 지원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일반어가와, 수산계학생,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00년까지 총 42개소를 선정하여 34억원을 지원하였다.

(4)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96년도말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00말 현재 780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바,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매년 정기적인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가. 생산기반 정비

(1) 진흥지역 중심으로 우량농지에 대한 경지정리 촉진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필지의 규모화, 용·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 농로의 정비와 환지를 통한 분산된 개인농지를 집단화하는 사업으로, 영농기계화 노동시간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어 쌀경쟁력 제고 대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다.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논면적 1,149천ha중 농업진흥지역내 665천ha와 농업진흥지역밖 135천ha를 합쳐 800천ha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추진하여, 2000봄까지 전체 논면적의 61%인 699천ha를 완료하였다.

2001년도에는 2000년 가을에 착수한 10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에 6천ha를 착수하여 2002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일반경지정리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 논면적	목 표	2000년까지	2001년계획	2002년이후
○ 사 업 량	1,149	800 (915)	699 (802)	10 (11)	91 (102)
- 농업진흥지역	768	665 (760)	613 (702)	10 (11)	42 (47)
- 농업진흥지역밖	381	135 (155)	86 (100)	-	49 (55)
사 업 비	-	92,311	61,915	2,344	28,052

※ 마무리 기준, ()는 용배수로, 도로를 포함한 구역면적

(2) 우량농지 200천ha를 대구획경지재정리 추진

대구획경지재정리는 이미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필지규모가 소구획으로 대형농기계 영농이 어렵고 농로가 없거나 좁아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하며 용배수로는 관배수 기능이 겸용이거나 토공으로 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운 지역을, 필지규모는 3,000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를 분리구조물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 및 농산물 운반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 200천ha를 개발할 목표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2000년 봄마무리까지 73천ha를 완료하여 37%를 달성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000년도 가을에 착수한 6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가을에는 3.5천ha를 착수하여 2002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 사업은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사용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경지재정리함으로써 전문영농조직이 대규모로 영농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쌀생산비를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다 큰 효과가 있다.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0년까지	2001년계획	2002년이후
○사업량(천ha)	200	73	6	121
○사업비(억원)	53,673	17,808	1,383	34,482

※ 마무리 기준

(3) 발작물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밭기반정비 확대 추진

국민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채소, 과일 등 발작물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제고 및 농업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94년부터 받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받기반정비사업은 전체 밭 740천ha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110천ha(15%)를 정비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0년까지 9,438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목표의 38%인 42천ha를 정비하였으며, 2001년에는 1,291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투자하여 5천ha를 정비할 계획이다.

< 받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목 표	2000년까지	2001년계획	2001년이후
○사업량(천ha)	110	42	5	63
○사업비(억원)	25,794	9,438	1,291	15,065

(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산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계화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 22천km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까지 9,420억원을 투자하여 목표의 42.1%인 9.3천k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2001년에는 1,941억원을 투입하여 1.86천km를 확·포장할 예정이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운반시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로 등 일상 생활도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농촌생활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목 표	2000년까지	2001년계획	2002년이후
○사업량(천km)	22	9.27	1.86	10.87
○사업비(억원)	29,262	9,420	1,941	17,901

(5)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중 재해 취약시설과 흙수로 11,71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수지를 비롯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2,025개소의 수리시설중 '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2,089개소이고, 간지선 용·배수로의 경우는 46천km중 60%인 27천km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98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91개소 등 전국 1,589개소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48%인 759개소에 달할 뿐 아니라 방조제 외측보호 사석의 이탈,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제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에 의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사업의 확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0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관리 수리시설 5,033개 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75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629개 지구에 총 14,15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3,205억원을 투입하여 211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

구 분	개보수 대상		'00까지		2001 계획		2002 이후	
		%		%		%		%
	개소							
○ 사업물량	13,301	100	5,737	43.1	211	1.6	7,353	55.3
- 농기공수리시설	11,712	100	5,033	43.0	114	1.0	6,565	56
- 국가관리방조제	98	100	75	76.5	7	7.1	16	16.3
- 지방관리방조제	1,491	100	629	42.2	90	6.0	772	51.8
사업비 계	억원							
	89,789	100	16,861	18.8	3,205	3.6	69,723	77.6

(6)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은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수리시설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대책사업이다.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는 188천ha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안성천, 삼교천 등의 큰 하천변과 그 지천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수령논 등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하배수개선사업의 대상면적은 47천ha에 달하고 있어 2009년까지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00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및 저습답 235천ha중 101천ha가 완료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118개 지구에 2,226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41개지구 10천ha를 완공하여 배수개선율을 47%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대 상	'00년까지		'2001년		2002년		
		%	%	계획	%	이후	%	
	천ha							
○ 사업량	235	100	101	43	10	5	124	53
- 지표배수	188	100	99	53	10	5	79	96
- 지하배수	47	100	2	4	-	-	45	53
	억원							
○ 사업비	35,800	100	13,791	39	2,226	6	19,783	55

(7)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한해상습농경지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00년까지 총논면적 1,149천ha중 880천ha가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수리답으로 조성되었으나, 아직도 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4년까지 전체 논 목표면적 1,100천ha중 907천ha 82%를 수리답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중이다.

2001년도에는 3,099억원을 투자하여 65천ha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4.4천ha를 완공할 계획에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

총논면적	목 표	'00년까지	2001년계획	2002~2004년	2005년이후
1,149천ha	1,100	880	4	43	173

(8)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새로운 간척토지를 창출함과 아울러, 육상운송거리 단축, 생활공업용수 공급기반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새만금지구를 비롯한 7개지구, 122천ha를 대상으로 2000년까지 33%(19,148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고, 2001년도에는 38%(국고 1,579억원, 농지관리기금 900억원 계 2,479억원)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지구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사업비			사업기간
			'00년까지	2001년계획	2002년이후	
계(7지구)	121,560	57,420	19,148	2,509	35,763	
미호천(Ⅱ)	4,430	2,059	1,325	240	494	'89~2003
금 강(Ⅱ)	43,000	5,089	1,877	351	2,861	'89~2006
홍 보	8,100	2,771	1,549	180	1,042	'91~2005
영산강(Ⅲ-1)	13,160	6,631	1,914	445	4,272	'85~2004
영산강(Ⅲ-2)	7,840	3,246	1,023	165	2,058	'89~2004
새만금	28,300	30,489	11,385	1,073	18,031	'91~2011
영산강(Ⅳ)	16,730	7,135	75	55	7,005	'01~2006

(9)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은 전국 연안 자연부락 단위인 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 지역의 교통, 상권, 물류, 관광등의 종합적인 기능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가장 큰 재산인 어선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94년부터 2004년까지 5,432억원을 투자,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에 선착장·물량장 등 어선계류시설을 포함하여 '00년까지 전국 93개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내의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등에 2,916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01년에는 32개 권역내에 350억원을 투입하여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등을 추진중에 있다.

나. 농업의 기계화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가) 추진배경

'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업기계화촉진 시책에 따라 농업노동력이 절감되고 농업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기계화가 농업구조개선촉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가격·유통 등 공급정책이나 농기계산업구조의 경쟁력 약화, 농기계 사후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 기계화촉진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나 21세기 농정여건에 걸맞게 농업기계화 중장기계획의 기본틀을 새로이 하고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에 농기계공급제도의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001년 하반기에도 중장기 농업기계화정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기계화 정책의 당면과제와 제도개선

농업여건의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차례의 전문가 토의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00.12월에 2001년도에 시행할 농기계공급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농기계 공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농기계판매에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업체통보가격 범위내에서 업체경영사정과 시장기능에 따라 할인판매 등을 통한 자유경쟁판매 여건을 조성하였고, 용자지원 방식은

중전의 정율지원방식에서 정액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정율제방식은 농기계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고 실거래가격이 정산금액과 상이하거나 할인판매 등 유통질서문란 소지가 있으며, 모델변경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슷한 규격·성능을 가진 농기계를 그룹으로 묶어 기준가격을 정하고 용자비율은 기준가격의 70%를 정액으로 정하되, 정책목적에 따라 용자비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범위와 용자지원한도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자력구입이 가능한 100만원미만 소형·저가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당 최고용자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용자금이 특정인에게 편중지원 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대당 공급가격 3천만원이상인 기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규모와 경영계획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경영규모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둘째, 농기계 A/S실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신속한 부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부품관리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품종합판매점을 육성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셋째, 저비용기계화의 실현과 농가부담 경감, 자원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였다.

(2) 농기계 지원공급

2001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운영지원사업과 식용콩 자급을 제고 대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가 구입하는 곡물냉각기를 용자지원 해주고, 지역농협에서 구입하는 콩선별기와 콩정선기에 대하여도 용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용자범위를 확대 조정하였다. 농기계구입지원 총사업비는 9,200억원(국고용자 1,840, 농협용자 4,600, 자부담 2,760)으로 123천대의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2000년 농기계구입지원사업비 7,737억원보다 1,463억원(19%)이 늘어난 것으로 농기계 적기공급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을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가)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수리용 부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적기영농을 가능케 하고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347억의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장 농기계 운반용 차량 구입비 뿐만 아니라 수리·정비용 건축비 등 사후봉사사업소의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리용부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5개이상의 시·군을 권역화하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부품종합판매점에 대하여 5억원까지 부품확보자금을 용자지원하여 신규로 육성하는 한편, 신속한 부품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이의 전산망을 구축토록 하고 부품관리 전산화 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부품관리 전산화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금년부터 수리용부품 공급실태 및 수리불편 민원처리 실적 등을 연2회 종합평가하고, 사후봉사 실태가 부실한 제조업체와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제외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써 신속한 사후봉사 체계를 확립토록 하였다.

또한,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B/S(사전서비스)실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주관하에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지역순회수리봉사반을 편성하여 수리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기사와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운전 요원 284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을단위 기계화영농사를 1,000명 양성하는 등 115천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35개소를 2000년도와 동일하게 보조지원 20%, 용자 60%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농가가 사용한 이앙기와 콤바인을 농한기에 수리·정비한 후 공동보관하여 영농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봉사업소 보관창고 50개소를 2000년도와 동일하게 70%를 용자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를 보유한 일반농가에 대해서도 신규로 보관창고 설치비 70%를 용자지원하여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 촉진

농기계구입 보조금폐지 및 용자비율 축소, 농가경제 어려움 등에 따라 중고농기계 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고 농기계 적정판매가격 산정이나 품질보증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중고농기계 거래는 극히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선 농협으로 하여금 7개소의 중고농기계 임시 상설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농업기계화연구소와 KREI 등의 지원을 받아 중고농기계의 적정판매가격 산정방안과 품질평가방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설판매장 설치비 지원 및 중고농기계 용자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등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 추진 시책을 적극 펴 나갈 계획이다.

(4) 여성용 농기계의 개발 보급

농촌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여성화·노령화 추세에 따라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남성위주로 농기계가 개발 보급됨에 따라 여성이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여성이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를 개발 보급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미 보급된 농기계중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트랙터의 클러치 작동을 쉽게 하거나 승용형 이앙기의 운전석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이 다루기 쉽게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추수확기, 마늘뿌리줄기절단기 등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성능이 좋은 농기계를 중점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농기계생산지원

(가)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업용면세유 공급은 농가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86.3.1부터 조세 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사용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제세금을 면제 공급하고 있다.

면세대상 농업기계는 영농에 많이 사용하는 기종중심으로 농용트랙터, 콤파인, 건조기 등 38개 기종이며 농업인이 면세 석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지역농협에 보유농업기계를 신고하면 실제 영농에 필요한 전량의 면세 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2001년도 재정경제부로 부터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 석유류의 공급 한도량은 휘발유 141천kl, 실내등유 410천kl, 보일러등유 40천kl, 경유 1,663천kl, 중유 104천kl, 윤활유 7천kl, LPG 3천톤 등 총 2,368천kl이다.

이에 따른 2001년도 면세액추정은 5,957억원에 이르며, 세부적인 면세내역(2001.10.1기준)은 부가가치세 10%, 교통세는 리터당 휘발유 588원, 경유 185원이며, 특별소비세는 등유 82원, 중유 3원, LPG 40원이고 교육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5%이며, 등유는 특별소비세의 15%이다. 주행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1.5%이며 판매 부과금은 등유에 한하여 리터당 23원이다. 금년도 상반기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실적은 1,013천kl로서 배정량대비 42.8%이며 전년대비 Δ 4.4% 수준이다

(나)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은 농기계 사전 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 하므로써 영농기 집중수요에 대비하고, 국산시설농업기자재의 보급촉진과 신기술농기계 개발촉진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자금,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신기술농기계생산자금으로 사용된다.

2001년도 총사업비는 400억원으로서 농기계생산비축에 380억원, 시설 농업기자재생산지원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생산비축자금은 년리5%, 융자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해야 하며, 시설농업기자재지원은 년리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해야 한다. 업체별 지원 규모는 최근2년간 매출실적, 국산화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출 지원한다.

금년도 농기계생산비축자금 지원은 농기계 5대업체와 중소기업체 포함 22개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농업기자재자금은 5개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확대

농가가 생산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 처리하는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노동력을 절감하고, 쌀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낮추며, 고품질의 지역별 특산미를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수확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00년까지 324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한데 이어, 2001년에는 4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360개소로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인근 쌀작목반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단위 : 개소, 억원)

	'91년~'00년	2000년계획	2001년~2004년	계
개 소 수	314 (367)	12 (76)	36 (674)	360 (1,117)
사 업 비	6,897	630	-	11,557

*()내서는 건조·저장시설임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등의 영향에 따라 풍·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받기반 정비, 관수시설의 확보, 비가림시설, 공동육묘장 설치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온실의 표준화 및 시설자재 국산화로 설치단가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며,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생산기반의 구축과 인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현장애로 기술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여 파종·수확 등 전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축산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게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의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자동화·현대화된 사육기반을 구축하였고, 축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공판장 및 냉장육판매업소 시설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1년까지 총 9개소(기존 2개소 포함)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8개소를 완공하였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다.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이 완공되어 본격 가동되면 유통단계의 축소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축계열화사업을 통해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축산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가.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참여도의 확대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은 농업후방관련산업으로서 농산물 수요를 증대하고 농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89년부터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00년말까지 2,76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에 1,079개소의 농산물 가공 공장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5,691억원, 농어촌 유희인력 고용은 약 8,500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5인이상 농가공동체, 주류제조면허 추천·명인 지정업체, 일반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2001년도에는 7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5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경기침체로 제조업 전체가 위축되고 식품 소비침체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많은 농산물가공업체가 부도 등 경영부실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영세·한계업체 233개소를 퇴출조치하여 전체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지원에서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9년부터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TV,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나. 종자산업의 육성

'97년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과 21세기 주요산업으로 생물산업의 부상 등 종자산업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자수급의 안정도모와 신품종육성 등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육성대책을 추진중이다.

채소부문의 종자업체는 '00년말 현재 70여 업체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품종육종기술 수준이 낮고 경영규모 등이 영세한 편이므로 이들 종자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체별로 지정('99.7)된 2~3개에 작물에 대하여 품종육성 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우량종자개발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95-'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2004
지원금액	11,429	3,000	2,440	2,905	2,776	6,000

무, 배추, 고추 등의 세계적인 품종육종 기술을 활용하고 협소한 국내 종자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종자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00년도 수출실적은 18,002천불로 전년 대비 3.8%증가하였다.

새로 개발된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품종육성자의 신품종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품종보호제도를 '98년부터 시행중이며, 품종보호제도 시행당시 27개 품종보호 대상작물을 2001년 현재 8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까지 모든 식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을 추진하여 국내 신품종의 국외보호와 품종육성자에게 외국의 품종 육성관련 정보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품종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존유전자원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중이다.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1) 개요

농림업분야의 기술은 타분야와 달리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이 농림업

과 관련한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점차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기초식량의 자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21세기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농특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첨단기술개발사업 2,678억원,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1,472억원)에 4,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기술개발사업은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타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과제와 품목별 일관기술 연구를 위한 기획연구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은 영농·영림·영어 현장에서 재배, 사양,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 환경, 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애로기술과제와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인개발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과제현황

'00년말 현재 총 1,996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과제가 1,173건, 첨단기술개발사업과제가 772건,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과제가 51건이다.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중 현장애로기술과제는 '94년부터 '99년까지 577건, '00년에 81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658건이며, 농업인개발과제 또한 '97년부터 '99년까지 374건, '00년에 141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515건이다.

첨단기술개발사업 중 첨단기술과제는 '95년부터 '99년까지 582건, '00년에 133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715건이며, 기획연구과제는 '97년부터 '99년까지 43건, '00년에 14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57건이다.

한편 벤처형 중소기업 개발과제는 '98년에 11건, '99년에 17건, '00년에 23건이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농림기술개발과제 현황>

구 분	연구 과제			
	선 정	계 속	완 료	기 타
현장애로기술과제	658	190	439	29
첨단기술과제	715	355	341	19
기획연구과제	57	46	11	-
농업인개발과제	515	198	307	10
벤처형중소기업개발과제	51	38	8	5
계	1,996	827	1,106	63

한편 '00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1,106개 과제로 이중 651개 과제는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665건을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으며, 320개 과제는 현장적용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이들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 계약을 체결한 우수 기술개발 과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업체 기술이전우수과제 내역 〉

연구성과 (제품명)	제 품 설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관 (생산업체)	경제적 효과
건강홍미	홍국균을 이용한 쌀로 고혈압예방, 혈압강화 등 심혈관계질환효과있 는 쌀	223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주)제네티 카)	○2001년 1월 제품생산 ○2001년 현재 1억원 매출 ○2001년도 3억원 매출예상 ○2002년도 이후 연간 약 20~ 30억원 매출예상
씻어나온 쌀	알칼리 이온수로 씻은 뒤 급속 건조시킨 쌀 (쌀벌레, 곰팡이, 변패 없음)	779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주)라이스 텍)	○2000년 12월 제품생산 ○2001년 현재 7억원 매출 ○2001년도 40억원 매출예상 ○2002년도 65억, 2003년 115억 원 매출예상
양과음료	양과를 원료로 한 식이 섬유, 비타민 등이 강화 된 양과음료	80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현대영농조 합법인)	○'98년부터 제품생산 ○2000년도 추가기술이전 ○2000년까지 국내매출 32.5억원 ○수출 20만불 ○2001년 이후 100억원 매출 70만불 수출예상
키 토 산, 키틴효소	채소류의 가공 처리에 적합하고, 유통기간 연 장	200	아주대학교 ((주)아미코 젠)	○2000년 6월 생산 ○2000년 효소 4kg생산 국내매 출 5억 4천만원 ○일본 등 수출
에코바이 오	퇴비 부숙촉진 하는 약 취저감미생물로 축산분 뇨처리	105	축산기술연구 소 ((주)우진B&G)	○2001년 5월 생산 ○2001년 현재 1.2억원 매출 ○2002년 이후 연간 50억원 매출
녹차음료	녹차를 이용하여 음료 개발	99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보성녹차)	○'98년부터 제품생산 ○'98년 국내매출 10억원 ○'99년 37억원 ○2000년 39억원 매출
버섯스넥 과자	버섯을 이용하여 만든 과자	124	포천중균배양 소 (포천버섯개 발(주))	○'97년부터 제품생산 ○'97~'98년 40만 2천불 수출 국내매출 10억 1천만원 ○'99년 국내매출 9억2천만원

(3) 2001년도 제도개선 사항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Project Base System)를 실시하는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강화하여 우수한 연구자들의 참여유도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기술개발 및 산업화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업대응자금(matching fund) 한도를 개방하여 참여기업은 과제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기술의 산업화 및 실용화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요

수산업을 21세기 종합해양 과학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7년까지는 농림수산분야를 농림부에서 함께 추진하여 왔으나 '98년부터 수산분야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 이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과 수산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며, 수산기술개발사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과제현황

지금까지 총 246개 과제를 선정하여 138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108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00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138개 과제중 17개 과제가 산업체에 기술이전되었고, 19개 과제는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68개 과제는 대어업인 기술지도에 활용되고 있고, 58개 과제는 특허출원하는 등 연구성과가 어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 농어업정보화 촉진

'99년 농업·농촌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정보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초기단계 정보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농업인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식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은 많은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IT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한편,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올해 기존의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계획」(01.8)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정보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조기 확충, 정보화교육의 체계화, 출하지원 시스템 확대 등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국가 정보화추진전략 「Cyber Korea 21」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어디서라도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이다. 다만 실제 일반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통신망 구축은 민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가 경제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요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경우 ADSL 등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도·농간의 정보통신기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여온 결과, 2000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읍지역에 초고속통신서비스(ADSL)가 단계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여 2001년 중에 모든 읍지역(총 200개)에 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이며, 면 지역

에 대하여도 금년 말까지 753개(총 1,223개의 62%) 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2년 말까지 거의 모든 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속통신서비스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농가를 위하여 금년 6월 위성인터넷 사용료를 ADSL 라이트 요금 수준(3만원/월 정액제)으로 인하했으며, 부담이 되고 있는 위성수신장비 설치비(약 40만원 수준)의 임대제 전환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2)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고 정보화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98년부터 2004년까지 15만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추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진전이 빨라지고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의 정보화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계획을 수정, 교육목표를 2000~2005년까지 40만명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장년 층을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되 이 중 10만명에 대하여는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과 지역 여건상 교육기회가 없는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현장 위주의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화만 하면 지역농과 대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주는 '농업정보119서비스'를 전국 22개 농과대학에서 실시하여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작년 4월부터는 컴퓨터 등 교육 장비를 탑재한 특장차 버스를 이용하여,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읍·면지역별로 현지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시·군의 전산교육장이나 지역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하는 시군 단위의 중급교육과정과 전국 10개 농과계 대학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분리하여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수사례발굴·보급, 정보경진대회와 농업인이 쉽게 접근가능한 인쇄매체(팜플렛, 농업정보 소식지 등)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3)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하에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업인들의 정보활용능력과 활용정도가 경쟁력의 관건이라 보고 정보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실제경영에 도움되도록 관련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판매에 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수급조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99년에 개발한 농산물출하지원 시스템(<http://chulha.affis.net>)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업인, 상인 등 시장 참여자에게 도매시장별 거래가격, 거래물량, 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하지원정보시스템에서는 주요채소류(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서 농산물 출하시 활용하면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장별·법인별·가격대별 출하물량을 분석한 정보와 연차별 재배면적분석 및 집중출하시기의 가격·거래물량·가격변화 등의 분석정보가 각종 그래프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에 부류별 대표품목(오이, 상추, 사과, 장미, 한우, 돼지)을 추가하고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99년부터 운영중인 인터넷 「농산물 통합쇼핑몰(<http://www.a-peace.com>)」의 참여 쇼핑몰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One-Stop Shopping을 위하여 통합쇼핑몰에서 상품구매와 대금결제가 한번에 가능하도록 통합장바구니기능과 대량직거래, 공동구매 등 다양한 기능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농업인들의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99년에 106농가를 시작으로 '00년에는 200농가, 금년에는 500농가에 대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저변확산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등 농업관련종사자 및 국내외의 농업관련 지식·기술·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의 댐을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지식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은 농업에 관한 Portal Site로서의 역할과 농업인 개개인에게 맞춤형정보를 제공하여 농업 및 생활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상호 공유가 가능하고, 정보의 홍수속에서 빠른 시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경험에 의한 영농활동에서 지식·정보를 활용한 영농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지식이 또다른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의 생명력이 증가되어 농업·농촌정보화 촉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4) 농림지식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2000년에 구축한 시스템을 시험운영(2001. 1 ~ 2월)을 거쳐 서비스를 실시(2001. 3. 3)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해외정보 구축강화, 인물정보강화, 사이버커뮤니티 구축, 출하지원시스템 연계, e-Learning 시스템 구축, 국회 및 국정감사DB 구축, 국내농업관련기사DB 구축, 농업관련기관(외청 및 소속기관·단체 등 12개 기관)의 중요DB를 상호 공유·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지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식경영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5) 어업정보화 촉진

새로운 UN해양법협약에 의한 국제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어업의 어로구역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잡는어업에서 기르는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양식기술정보 활용과 전국도매시장의 시황정보를 보면서 출하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어업부문에든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어촌 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 산업분야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업부문의 정보화 기반을 크게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어선조업 DB구축과 수산물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어로어업에 필요한 어군정보와 출하에 필요한 시황정보 등을 어업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수산물의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정보통신이 PC통신에서 인터넷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어군정보, 위판 정보, 어업기술정보, 어촌정보등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어업관련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 추진

수산물은 복잡 다기한 유통절차를 거쳐 소비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산물 유통정보 제공기반의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수산물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유통주체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수산물 수급 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종사자와 소비자들이 쉽게 수산물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정부예산, 정보화촉진기금 및 유통주체 부담금 등 4,509백만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정보'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산지수협 등 65개소에 대한 위판정보 및 조합업무전산화를 하였으며,

4개 수산부류도매시장에 대한 경락정보 DB화, 1개 도매시장에 대한 무선응찰방식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 대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01년 수산물유통정보사업은 664백만원의 예산과 운영기관 부담금 242백만원 등 906백만원을 활용 8개 산지수협에 대한 정보화, 7개소의 도매시장 경락정보 DB화 및 2개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스템을 추가 구축토록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수산물 수출입통계DB를 구축하여 수산물유통정보를 유통종사자, 어업인 및 소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가. 수출진흥대책

(1) 농산물수출 현황

농산물수출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임과 동시에 WTO체제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됨과 아울러 우리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표준화 등 유통시스템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의 바로 이웃에는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시장인 일본과 거대 시장으로 등장한 중국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증대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연도('97~2000년)의 농림축산물 수출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작년도 3월에 발생한 구제역 발생 영향으로 농림축산물 수출의 20%를 차지하던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화훼, 채소, 과실류 등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수출농업인의 수출마인드 향상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성과의 가시화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며 중장기적인 수출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최근연도의 수출동향>

(단위:백만불)

	'97	2000	증감율(%)
(전체 농림축산물)	1,759.2	1,531.9	△12.9
○ 가공 농림축산물	1,143.5	981.9	△14.1
○ 신선 농림축산물	615.7	550.0	△10.7
- 김 치	39.7	78.8	98.5
- 돼지고기	242.3	75.0	△69.0
- 채 소	38.4	107.1	178.9
- 화 훼	5.3	28.9	445.3

한편, 수출농업의 인프라 구축의 정도를 나타내는 참여농가와 수출업체, 수출국, 수출품목 등도 상당한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수출농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수출인프라의 변화 추이>

- 수출국 : ('97) 148개국 → (2000) 159개국
- 수출품목(100만불이상) : ('97) 147품목 → (2000) 163품목
- 수출업체수 : ('97) 1,094업체 → (2000) 1,400업체
- 수출참여농가수 : ('97) 15,030농가 → (2000) 17,000농가

(2) 그간의 수출농업 육성시책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을 대별하면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및 공급기반구축』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첫째, 수출전문단지를 97년의 68개 단지에서 2001년 8월말현재 129개 단지로 확대 지정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를 확보하였으며,

둘째, 수출컨설팅도 98년 이후 2000년까지 141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WTO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수출물류비의 지원을 97년 51억원에서 2001년에는 212억원으로 확대하고 97년 1,976억원수준이던 수출자금융자규모도 2001년에는 3,758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출관련 경영체의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토록 하였다.

넷째, 국내외 수출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5개국 7개 농업무역관(KATIC)과 25개국 59명의 모니터로부터 입수되는 수출관련정보를 인터넷 정보망인 KATI 와 FAX신문 등을 통하여 적시에 실수요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첫째, 박람회 참가 및 특판전 개최를 확대(98년 12회→2000년 22회)하여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바이어의 발굴, 우수선진제품의 벤치마킹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산 농산물의 세계브랜드화를 위해 인삼 및 김치캐릭터를 제정하여 주요수출국에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종래의 라디오와 빌보드 위주의 단편적인 홍보에서 현지TV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JUSCO등 해외의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지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수출시스템의 구축 노력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의 수출지원시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97년 101억원 수준이던 수출지원예산이 2001년에는 305억원으로 3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수출지원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97	'98	'99	2001
계	10,130	16,253	23,579	30,512
<input type="checkbox"/>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4,723	5,962	8,224	9,348
○ 국제농산물박람회	2,520	3,711	3,796	4,098
○ 수출활성화 사업	418	363	777	986
○ 대형유통업체 직거래체제구축	-	33	840	500
○ 수출홍보사업	1,186	1,067	1,994	2,648
○ 해외시장정보사업	599	788	817	1,116
<input type="checkbox"/> 농축산물 판매촉진 (수출자금융자)	5,407 (1,976억원)	10,291 (2,671억원)	15,355 (3,126억원)	21,194 (3,758억원)

(3) 향후의 추진대책

최근의 농산물 수출은 작년봄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또한 세계경기의 장기침체와 더불어 국가전체 수출부진이 심화되는 등 수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적극 추진 등에 따른 시장다변화로 농림축산물 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도 8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증가한 939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돈육을 제외한 신선농산물은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하는 등 농가소득과 직결된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 천톤, 백만\$, %)

구 분	'99	2000	2001 목표	2000.		2001.		증감율	
				1~8월		1~8월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679.8	1,531.9	1,700	885.7	929.8	935.0	939.0	5.6	1.0
신선농림축산물	791.3	550.0	581	86.1	273.1	127.5	253.7	48.1	△7.1
가공농림축산물	888.5	981.9	1,119	799.6	656.7	807.5	685.3	1.0	4.4

앞으로 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공급과 수출전략품목의 집중육성 및 해외시장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출진흥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채소, 과일 등 수출선도품목과 김치, 인삼, 화훼, 돈육, 계육 등 수출유망품목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고,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둘째, 수출금융경색완화를 위해 수출자금 용자지원규모와 농산물판매촉진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업체 평가를 통해 융자금리 차등지원 등 우수 수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셋째, 수출애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컨설팅 및 수출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수출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수출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넷째, 수출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를 위해 2002년까지 전남 광양과 경남 마산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수출농산물의 수확직 후부터 공동예냉, 선별, 포장, 저온저장, 운송, 검역 등 일관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수출확대 대책회의의 수시 개최를 통하여 수출동향의 점검과 함께 수출지원기관에서 마련한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지원기관 상호간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수출관련 정보의 공유, 시장개척활동의 공동추진 등 수출지원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4)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금년도 수산물수출은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경기침체 및 일부어종의 국내 생산저조로 어느해보다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어 이를 극복하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첫째, 수출주력시장인 일본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한·일수산물교역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일본의 수출입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일 수출용 활넙치 양식장등록의 확대를 통하여 원활한 수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둘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참가 및 대만·홍콩, 싱가포르·호주에 수산물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신규 구매선 발굴과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수출상품포장디자인 개발 및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 국한된 수산물 물권담보 융자제도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셋째, 수출주력품목인 굴 수출확대를 위하여 일본 현지 TV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대일 수출품 위생관리 협의, 우리나라 활어운반 특수차량의 일본내 운행을 실현하는 등 교역장애 해소를 위한 통상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수입관리대책

(1)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3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기관배정방식, 수입권공매방식, 실수요자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17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는 지정기관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밤, 대추 등 6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옥수수, 대두 등 40개 품목그룹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요자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기관배정방식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88~'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국내여건 변화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증량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품목은 사료용 원료인 옥수수, 대두, 보조사료 등과, 국민기초식품의 생산원료인 맥주맥, 맥아 등 20개 품목이다.

(2) 관련법상의 각종 제도의 활용

<할당관세>

사료용곡물, 농업용원자재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하 조치하였으며(2001년 하반기 : 밀, 사료용근채류, 농약원제 등 24개 품목) 특히, 2001년 하반기에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료용 겉보리를 추가 적용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비료용 채종박에도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조정관세>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2001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찹쌀, 바나나, 메주 등 8개 품목이며, 메주(40%→25)와 전사(18%→16) 등은 축소 적용하였다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UR 협정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1.9월말 현재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은 녹두, 팥, 대두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수입개방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마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와 함께 대 중국 협상결과에 따라 2002년말 까지 긴급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3) 농축산물 밀수근절대책 추진

국내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밀반입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조 아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깨, 콩나물콩 등 10여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세청과 협조하여 기준신고가격을 정하고 이 보다 낮게 신고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 단속하고 있다. 한편,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요원(325명)에게 사범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산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농산물의 휴대품 과다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0년 4월부터 부산항과 군산항에 대해 1인당 휴대품 반입 면세한도를 80kg에서 50kg으로 인하 조정토록 하였으며, 휴대농산물의 90%가 반입되는 인천항에 대해서도 2000.10월부터 확대 적용한 결과, 2001.9월말 현재 휴대품의 반입이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하였다

(4) 수산물 수입관리대책

정부에서는 값이 싼 외국산 수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생산어업인 보호 및 중국산 활어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양식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첫째, 활돔, 활농어, 냉동오징어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저가 및 저질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돔, 활미꾸라지, 냉동낙지, 냉동명태필렛, 새우젓, 활뱀장어 등 6개품목에 대해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급증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국내 수산업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수산자원의 부존상태에 따라 국내 생산량등과 연계하여 국내생산실적, 수급실적등을 고려하여 일정물량까지는 저율의관세 부과, 일정기준 이상 수입량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관리하는 관세율할당(TRQ)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셋째,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체결로 금년 7월 1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등록된 가공공장에서 생산되고, 위생안전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수산물에 한해서 수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금속탐지기 검사 실시 등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질병감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붕어, 잉어 등 양식장에 방류하는 어종에 대하여도 수산동식물 이식승인대상 품목으로 포함시켜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국내에 수입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입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및 불법 위장 수산물 수입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곱째, 수입수산물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검사제도 강화차원에서 2001. 2부터는 선도보장이 가능한 냉동품, 염장품, 건제품 등은 정밀검사후 통관토록 하고, 활·신선냉장수산물이 부적합된 경우에는 해당국가, 해당품목에 대하여 선통관을 금지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 10부터는 윗감용 수산물에 대하여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6. 친환경농업의 육성

그동안 증산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의 환경정화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여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 중장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97년도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 1월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산림환경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제교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 1.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농업환경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및 농약빈병·폐비닐·폐농기계와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데, 농사 중 발생하는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우리나라 전체사용량은 19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농약사용량을 2005년까지 30%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개발·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농약절감형 재배 기술지도, 천적이용 등 병해충종합방제 체제 구축과 미생물농약, 식물성농약 등 저독성농약을 개발·보급 중이다.

(2)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99년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으로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 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는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비료사용량을 2005년까지 30%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작물 양분 종합관리(INM)실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토양정밀검정에 따른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주문형 배합비료, 축분퇴비 등 환경친화형 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비료사용량을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3)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우리나라의 축종별 사육두수(2000.12)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약 48백만톤에 달한다. 축산분뇨처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대상 농가는 농림부에서 처리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를 공동수거·정화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2000년말 기준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총 62천 농가로 95%인 59천 농가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설치농가 중 92%는 자원화시설, 8%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였다. 가축분뇨는 2010년까지 축산폐비로 자원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4)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99년말 현재 3,365천대로서 이 중 약 0.8%인 26천대 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74%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 중이다.

이러한 폐농기계를 수거, 해체, 압착할 수 있도록 폐농기계처리장 설치를 '94년부터 '96년까지 지원하여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에서 “폐농기계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폐농기계처리장에서 수거·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폐농기계 수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시장·군수가 마련한 장소이외에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00년 각각 75백만개, 97천여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환경부 산하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45~65% 수준에 그쳐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4월과 11월을 중점 수집기간으로 정하여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집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농약빈병의 경우 '97.10월부터는 농협을 통하여서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이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과다 의존하여 농작물이 재배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하천·호수의 부영양화, 축산분뇨 등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용수의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사용, 객토사업 및 농업용수 수질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토양개량사업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다. '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년에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규산, 석회 각각 4년 1주기로 확대 공급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 객토사업

사질토 등과 같은 생산성이 낮은 토양과 휴·폐광산 인근의 오염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한 객토사업은 '96년까지는 1년 상환의 단기성 농업 경영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97년부터는 국고융자(3년)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휴·폐광산 인근의 오염농경지의 개량을 위해서 '99년부터는 지역특화사업에 포함시켜 전액 보조사업(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다.

(3)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추이를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전국 저수지 18천개소에 대한 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수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시설과 규모가 비교적 큰 주요 농업용수원에 대하여는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연2회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측정망은 '98년에 200지점, '99년에 350지점, 2000년에는 450지점을 운영하였고, 2001년에는 500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550지점을 운영하는 등 수질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수질조사결과는 환경부, 시·도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저수지 주변 청소,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중 수질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자연정화기법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99년에는 4개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이 중 3개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세부완료지구중 전남 무안군 감돈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용수 수질개선 공법개발 등 연구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1)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중산간지의 중소규모의 가족농들이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면서, 토양과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착 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지당 2억5천만원씩, 총 2,50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1,00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00년까지 500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1년에는 75억원을 투자하여 30개소를 조성 중에 있다.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지구당 10~20억원씩, 총 189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00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하여 10개 지구를 조성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조성 중에 있다.

(3)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벼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 오염원을 줄여 농업 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안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7억원을 투자하여 16개소의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을 선정하여 2001년까지 3년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벼 재배에 있어 친환경농업의 핵심기술인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통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99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행에 따른 농가 소득손실을 직접지불로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할 경우 ha당 524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와 '00년도에 10,572ha에 5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동일면적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유통시설 확충, 구매자금 지원, 품질인증 확대 등 판매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생산·유통 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행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 농가자율신고로 운용되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와 정부 등 인증기관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통합하여 국제수준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를 도입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유통시설의 확충, 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확대, 소비자의 현장체험기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농어가 경영안정대책의 추진

가. 농가경영안정대책추진

(1) 추진배경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이제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확보 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난 '92년부터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시설자동화, 현대화 등을 위한 농업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97년말 IMF경제위기로 인해 경영비의 대폭 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또한, 2000년 국내 과일가격이 하락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막혀 국내돼지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중국산 마늘 수입증가 등으로 마늘재배 농가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IMF이후 국내경기가 위축되어 농산물 수요가 감소해 농산물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고도 IMF 경제위기이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기,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의 저리대체, 경영개선자금 지원, 연대 보증 해소 등 각종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농업인들이 부채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기에는 미흡하여 지난 2000.12.20일 여·야 합의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2001.1.8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2) 2001년도 농가부채대책 내용 및 특징

(가) 중장기 정책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중장기 정책자금이라 함은 농업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통상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정책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단기 회전성 자금(영농자금)과,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주택개량자금 등), 그리고 지원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자금(농지구입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지원 대상 자금은 '98~2000년 기간중 상환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과 2001~2003 기간 중에 상환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3조 6,113억원(2001: 13,857, 2002: 11,261, 2003 : 10,995)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당초 상환해야 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협동조합 자금으로 신규대출 받아 상환하고, 신규대출 받은 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때 협동조합에서 신규 대출된 자금의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간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나) 금리 11~12%대의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9조6,300억원을 5년간 연리 6.5%로 낮추어 준다.

상호금융자금이라 함은 통상 일선조합에서 11~12%대의 금리로 빌린 자금이면 상호금융자금이라고 보면 무방하다. 이번 부채대책에 의한 지원은 특별법 시행일 현재 상호금융 대출잔액의 70%이내에서 지원하며, 다만 특별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이 '99.12.31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12.31 현재의 대출잔액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다)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작년에 1.8조원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업경영개선자금은 부도나 파산위기 등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이 자금은 준

전업농 규모이상이거나 농업용 대출잔액이 5천만원이상인 농업경영체로 경영평가결과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데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타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한 기존 대출금 대체용, 신규 운영자금, 연체해소용, 대위변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 6.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라) 연대보증 피해 농업인에게 특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3조 5천억원 규모의 농업인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대체하여 약 30만호의 농가를 연쇄도산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무자력, 파산, 사망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불가피 하게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98.1.1이후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거나 대신 상환할 연대보증인에 대해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리 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마) 연체자에 대한 연대보증 해소 지원

특별법 시행일 현재 채무를 연체하고 있으나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감면, 연체 해소자금 지원을 통해 채권을 정상화시킨 다음 연대보증을 선 농업인의 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대체하여 연대보증을 해소한다.

(바) 정상채무상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채무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자금,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2001~2003년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는 경우 납입이자 일부를 환급해 준다. 즉 상환액에 대한 납부이자의 20%(약 금리 1%p)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준다

(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시행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농업인의 담보부족 문제로서, 정부에서 자금을 공급하여도 농업인은 담보 및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부채대책자금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명문화하여 농업인의 담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대책 자금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신보에 3,797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출연토록하여 농가부채특별대책자금 보증 지원에 필요한 소요기금을 지원하여 동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여건을 마련하였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에관한신용보증특례규정 및 동 준칙, 업무처리절차」를 제정하여 2001. 1. 22일부터 동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한 많은 농어업인이 보증을 이용하고 취급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증제한 대상인 타채권 충당을 허용하여 부채대책자금으로 기존 농업자금의 상환을 허용토록 하고, 부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원대상자 및 자금에 대하여는 농신보의 별도 확인절차를 생략하였으며, 기존의 보증한도와는 별도로 총 보증한도(개인10억원,법인15억원)이내에서 2001년 농가부채대책자금 보증 누계액만을 적용하여 모든 농업인이 1억원까지 간이 신용조사 및 연대보증인 입보 부담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1억원 초과 보증시에도 농업인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하고, 부분보증(관리기관80%, 금융기관20%) 및 할증보증료(0.2%가산)를 적용하여 농업인의 연대보증인 입보 부담을 경감하였다.

다만,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연대보증인 입보도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보증상담표 및 보증금액결정기준 적용을 생략하고 일부 신용조사항목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신용조사구분을 완화(간이신용조사 5천만원 → 1억원)하고, 신용조사 심사평점을 하향조정(50~80점→50~65점)하였다.

또한, 부채대책 시행과정에서 농업인 및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케 하여 농업인의 신용보증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였다. 65세초과 농어업인에게도 5천만원까지는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토록 하고,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시 담보 부족분 평가를 현행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담보대출의 연체해소시에도 이자분에 대한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농신보 구상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위변제자금 지원시 손해금 전액감면과 연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채권보전 조치가 없을 경우에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농어민이 쉽게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01.7.24일자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신보의 보증배수를 현행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하여 보증여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부채대책에 따른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나. 어가경영안정대책 추진

우리나라의 수산업 경영여건은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발효와 해양환경의 악화 및 어업자원의 감소, 수산물수입 개방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고비용·저생산성이 심화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 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자금 1조 2,050억원, 해외자원생산자금 3,310억원 등 1조 5,360억원을 공급하고, 영어자금은 지난해 인하된 금리 5~5.5%로 지원하며, 해외자원 생산자금은 6.5~7.5%로 지원하던 것을 5.5%로 인하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0년도에 어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여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1,305억원을 6.5%로 저리대체 및 1년간 상환 연장하였고, 어업인들이 이미 사용중인 중장기 시설성 수산정책자금 128억원에 대하여 1년간 상환을 유예하였으며, 연리 6.5%,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2,000억원의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3,433억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어업인이 연대보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 534억원을 농신보 신용보증으로 전환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였다.

2000년도에 이어, 2001년에도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시행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어가부채경감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01~'03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1,722억원에 대하여 5.0%로 2년거치 5년분할 상환토록 하고,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3,700원을 저리인 6.5%로 5년간 지원하며, 연리 6.5%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해 주는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00년에 2,000억원 지원에 이어 '01년도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IMF이후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연리 5.0%로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으로 27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6,69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적인 어업영위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어업인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중장기 정책자금을 분할 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상환이자액의 20%를 환불해주고 있다.

그리고 각종 수산시설사업 등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IMF이전의 대출금리인 5%로 지원하는 등 어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업인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8.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가. 도입필요성

시장개방의 가속화 속에서 WTO체제에서 제약되는 가격지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제의 확대와 농업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농업재해보험 도입 등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2001년부터 89만ha의 논을 대상으로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과·배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8,204농가가 가입하였고, 현재 가입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나.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1) 배경 및 추진경위

논농업은 주곡의 생산기반이라는 식량안보 차원 뿐만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농업에 대한 주된 지원정책인 쌀 수매정책이 WTO 협정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WTO협정에서도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소득지지는 물론 생산기반 유지와 홍수방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비료·농약 적정사용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1999년 9월 21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농업인의 날('99. 11.11), 통합협동조합 출범식(2000.7.1) 등에서 논농업직불제를 2001년에 도입하겠다는 정부입장이 누차 표명된 바 있다.

1999년 12월에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교수,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기획단」이 구성되고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2001년 도입할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시행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외국의 제도 사례연구, 세부 시행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주관으로 조세연구원 및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도 병행하였으며, 도입방안 검토시 학계, 언론계,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정책토론회(3.22, 5.12) 및 공청회(6.27)를 개최하여 농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일반 경제학자들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방안에 반영하였다.

「기획단」도 누차의 회의와 토론 거쳐 8월 24일 최종회의를 갖고 전체 논에 대하여 전면적인 논농업직접지불제를 2001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시행준비 및 시행과정

기획단에서 최종 시안이 발표되자 그동안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세부 시행지침 및 세부 내용을 준비해 오던 농림부는 9월~10월중 전국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도상연습결과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서식·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도상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된 시행방안을 11월 29일 최종 확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시행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각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업무 담당자에 홍보를 하였다.

논농업직불제 신청기간은 1월부터 2월말까지였으나, 처음 시행하는 생소한 제도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3월말까지로 연장운영기로 결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행지침을 보완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1차로 직불제 대상을 선정한 결과 833천ha의 논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 결과는 계획면적 890천ha에 다소 미달한 것으로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이후 구제역, 산불, 가뭄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8월말까지 추가로 신청을 접수하기로 한바 있다.

(3) 앞으로 남은 과제

앞으로 과제는 논농업직불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제도정착을 위해 사업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화를 통한 생산기반유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

(1) 개요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점차 대형화되어 농가의 경영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피해통계 축적, 농가의 전업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과·배를 대상으로 주산지 중심으로 2001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대상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로써 이들 재해는 사과·배에서 발생하는 재해피해중에서 93%정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재해보험운영을 담당하며 거대재해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외 보험사에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는 순보험료 30%와 운영비 50%를 지원하여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2001년 5월 19일 가입신청을 마감한 결과 8,204 농가(사과 4,450, 배 3,754)가 가입하여,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정착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입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면적 23,400ha중 4,114ha로 가입율은 17.6%로서 이는 일본의 도입초년도 인 13.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향후 추진 방향

(가) 가입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2001년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는 순보험 30%, 운영비 50%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였으나 2002년에는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보험료분납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올해 처음 시행되어 보험상품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내년에는 보험료를 몇 회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하고, 보장수준을 높이고, 대상재해를

태풍, 우박, 동상해 이외에 호우를 추가하고, 필지별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 보험대상 품목 확대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연재해 걱정을 덜고 농업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험대상 품목을 사과·배에서 포도·단감·감귤·복숭아까지 확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 조건불리지역 발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1) 도입 필요성

WTO출범이후 수입개방 확대로 산간·오지 등 조건불리지역의 농업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농업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지역사회 및 농업기반유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2001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함에 따라 발농업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2) 추진현황

2001년 3월 이후 농림부는 세차례의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기본추진방향을 수립하고(2001.4.8),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읍·면별 통계자료 수집 등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시범 구역도를 가지고 강원도 홍천군(5.28), 충북 진천군(6.1) 현지조사를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구역도를 통해 경사도 경계 구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1,423개 읍·면중 399개 오지면의 밭을 대상으로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농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2002년에 399면의 밭경사도 조사 및 대상지구역도 작성을 위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발작물은 규모가 영세하고 품목이 다양하므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으로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대상지역 선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사례지구 조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사도 구분 및 구역도 제작기준 등을 정립하는 한편, 2002년 3월까지 대상면에 대한 구역도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마. 그린투어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1) 개요

1990년대 중반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특히 농업 소득의 증가가 주춤한 상황에서 비농업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아직까지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비교한 농가소득의 비중도 '95년 95% 수준에서 2000년에는 80.5%로 하락하였다.

전체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의 비중을 보아도 일본 87.0%(2000년), 대만 83.1%(1998년), 미국 88.6%(1997년), 프랑스 80.0%(1997년) 등 선진국과 주요경쟁국의 농외소득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0년 5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유통정책 등 전통적 의미의 농업정책 이외에 지역경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농촌의 고용을 확대하고 농가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추진방향

(가) 그린투어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향후 주5일근무제, 주5일수업제 도입 등으로 여가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고 유흥·위락 위주의 관광을 탈피하여 테마를 살리고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가생활패턴의 변화가 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형 그린투어를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1. 5월 그린투어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농외소득증대증장기추진계획』을 입안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중이다.

우선 전국 18개소에 36억원(국고 18억원, 지방비 18억원)을 투자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생활편의시설과 여가기반시설을 완비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농촌주민과 일선 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하여 여가체험 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도농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인경영보다는 마을 단위의 사업방식을 통해 마을 공동의 사업을 중점 지원해나가면서 과도한 시설투자보다는 농촌의 특색을 살린 마을을 조성하여 일반관광과는 구별되는 차별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나) 농산물가공·특산품 생산의 활성화

2000년말 현재 농산물가공업체 846개소, 특산단지 704개소가 운영중이며 가공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00년에 5,691억원을 기록하여 IMF 직후인 '98년의 4,269억원에 비해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가공산업과 특산품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지원보다는 기존에 운영중인 업체와 단지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내실화하면서 향토성과 지역

지명도를 상품화하기 위해 경영지도, 포장디자인 개발,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나갈 예정이다.

(다) 농공단지 활성화

농공단지는 2001. 6월말 현재까지 295개소가 지정되었고 3,806개 입주업체 중 3,343개 업체가 가동중이며(가동율 88%). 전체 고용은 10만 5천명, 현지인 고용은 69천명이다. 그중 농가가구원의 취업은 2만명 수준으로서 약 2,500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2000년중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 2월과 10월에 『농공단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앞으로 『농공단지활성화대책』을 내실있게 시행하는 한편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지역특화단지조성 유도 및 동종관련업종의 계열화로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산물 활용 및 고용확대를 통하여 농가의 취업소득 증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시책

1. 쌀산업

가. 쌀 산업의 여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수, 한발 등 기상 이변이 과거에 비해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발생기간도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전망은 과거에 비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하여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와 일본의 농림성에서는 인구증가, 농업용수 부족, 환경악화등으로 생산량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세계곡물 수급사정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세계인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식량생산의 단수증가는 한계에 도달해 계속 늘려 나가기 어렵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농지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이 경제성장으로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최대한의 국내생산능력(Capacity)을 확보하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의 주곡인 쌀의 경우, 지난 96년이후 풍작과 안정적인 수준의 생산으로 세계식량 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17~18%수준(62일분)을 다소 상회하는 안정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한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쌀의 자급은 매우 중요하다.

나. 중점추진시책

(1)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를 통한 우량농지 보전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 보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지소요면적 170만ha의 확보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으며,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체계 개편시 농지보전 원칙을 국토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정립하고 준농림지역내 우량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용수원 등 농업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농업보호구역내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시 동 사업예정지구에 농지를 신규 개발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우량농지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대책

2010년까지 경영규모 확대와 쌀 생산비 절감 등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쌀 생산 전문농가를 확보하기 위해 5ha이상의 쌀 전업농들이 쌀 생산량의 50% 수준을 담당케 할 계획이다.

2004년 쌀재협상을 앞두고 중국쌀 및 기타 외국쌀에 대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는 미질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을 재배면적의 22%까지 확대 보급하였으며, 2005년까지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50%까지 확대 보급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계획을 강구할 계획이다.

(3) 쌀 유통혁신 및 추곡수매 추진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작목반 등과의 계약재배로 품종을 단일화하여 고유브랜드화를 유도하고, 가격차등화로 양질미 생산을 촉진하여 쌀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계열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수매도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국회동의를 받아 영농기 이전에 희망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농가에 대하여는 일정한 선금을 지급하는 『약정수매제도』를 '9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20001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대해서는 금년 4월 국회동의를 받아 예시하고 수매계획량 575만석에 대해 569천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농가에 대하여는 조곡(1등급기준) 40kg가마당 2만7천1백원에 해당하는 6,143억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2. 채소·원예산업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주산단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기계화·시설자동화를 통해 규모화된 전업적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배·시설채소·꽃 등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1) 채 소

< 노지채소 >

고랭지채소·고추·마늘 등 품목별로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비가림 시설·관수시설·이식기·종합처리장·공동육묘장 등 주산단지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공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수급불안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소수급안정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먼저 사전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관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본농가수를 2000년 5,800호에서 10,000호로 늘리고, 모니터 수도 44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도록 하였으며, 관측내용을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관측정보 분산 방식도 다양화 하고, 농가의 판로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 자금을 2000년 3,500억원에서 2001년 4,5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였다.

최저보장가격제도 실시 대상품목을 2000년 10개 품목에서 2001년 12개 품목으로 늘리고 가격산정기준도 경영비 수준에서 정해 오던 것을 최고 직접생산비 수준까지 인상하여 결정토록 하는 한편, 최저보장가격이하로 3일이상 하락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던 것을 최저보장가격이하로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전에 개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선도형의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시설채소 >

'90년대 초반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에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97년 38백만불에 불과하던 채소류 수출이 '00년 107백만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 지원된 시설원에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순회 지도로 시설원에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국내의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유망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수출물류비 및 수출 수매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시설채소류의 생산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01년부터 시설 채소에 대해서도 수급안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대상품목과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과 수

'94~'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 20ha 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키낮은 밀식사과원조성등 생산기반시설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과실판매촉진사업 지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판매촉진행사의 확대로 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으로 '00년 신선과실류 수출이 전년보다 21% 증가한 2,734만\$(16.6천톤)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수출협의회를 통한 수출업체 애로해소 등 수출확대 기조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화 훼

절화·분화등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출하 등을 자율조절토록 유도하며, 현대화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일괄 지원하는 화훼생산유통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대도시 법정 도매시장(공판장)을 확대 설치하고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출하량 확대 등 운영을 활성화하며, 규격출하품 포장재 지원 등 규격출하를 확대하고 화훼공판장에 유통정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화훼생산·유통 지원단지중 수출유망작목 재배단지 50개소를 2004년까지 수출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3. 축산업

가. 한우산업

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한우번식기반을 확충하고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1) 한우번식기반 확충 및 생산비 절감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여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암소의 조기 도축을 억제하는 등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송아지 3회이상 생산농가에 대해 두당 20~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제주도 등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쇠고기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한우개량단지 중심의 한우등록 관리체계를 5두 이상의 개량농가 중심체계로 전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한 한우에 대한 출하포상금을 '99년 두당 8~12만원에서 2000년 10~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거세장려금(20만원/두)을 2000년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와 품질고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체세포 복제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 “복제소생산기술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복제소 생산 및 그 축산물의 안전성 여부 등을 연구토록 하고 있다.

나. 낙농산업

집유일원화 사업을 통해 민간 자율적인 수급안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집유 및 원유대금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우량젖소 보급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 동안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의 추진으로 두당 산유량이 크게 향상(2000 산유량 : 검정참여농가 8,086kg/두, 일반농가 6,591kg/두)되어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전체 젖소중 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두수비율을 선진국의 4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2001년에는 3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낙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집유일원화 등을 통한 새로운 낙농제도 정착

집유일원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낙농가 및 집유조합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유통장비개선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조속한 낙농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집유일원화 사업 참여 확대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진흥회가 주관하여 수요량에 맞는 원유의 계약생산 및 계약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수급을 도모하고, 용도별에 따른 원유가격의 차등가격제를 검토하는 등 안정적인 소비기반확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유의 과잉생산이나 소비 감소시 낙농진흥회를 통한 원유 및 유제품을 수매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수매자금 422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

며, 유업체를 대상으로 원유의 검사공영화를 전면 실시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원유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원유검사의 공정성 확보 및 원유품질 개선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3)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낙농자조금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

OEM방식에 의한 직공급 확대, 학교우유급식의 확대 등 유통구조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낙농자조금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우유에 대한 정보제공과 우유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다. 양돈산업

양돈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 시설, 축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촉진시켰고, 구제역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수출재개를 위해 품질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1) 전문종돈업 육성 및 우량종돈 보급 확대

전문종돈업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00년대 국내 종돈 소요두수의 40% 수준을 공급하기 위해 '96~2000년간 원종돈농장 5개소, 종돈농장 3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인증제도”의 활성화로 종돈수출 및 우량종돈 분양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이동제한지역 등에서 돼지 408천두와 안·등심 5,511톤을 구매하였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돼지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등의 상환을 유예하였으며 「우리축산물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산하기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별로 직거래를 통해 구매돈육을 판매하였다.

돼지생산두수가 늘어나고 수출재고물량 적체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부터 돼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정부에서는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돈 10%감축 추진, 육가공업체에 대한 비축자금(336억원) 지원, 학교급식 및 군납 등 단체급식 확대 추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캠페인 전개,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소비홍보 등 다각적인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였다.

(3) 돼지고기 수출재개 대책 추진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의 수출 재개를 위해 일본, 홍콩 및 필리핀 등의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국에 통상·검역관계관을 파견하여 위생조건 협의 및 해외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홍콩 및 필리핀 등에는 돼지고기와 부산물 수출이 재개되었으며, 일본에도 가열 돈육가공품의 수출재개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PSE 돈육감소,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 구제역 사후관리 등 수출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측과의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양계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인 양계산업의 주축이 될 전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시설, 자동화시설 및 장비 등을 종합지원하여 양계농가의 시설자동화·규모화에 기여하였다.

(1) 닭 개량사업 추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닭의 개량을 활성화하여 농가의 우량 종계 도입을 유도하고, 양계농가가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닭경제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4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에는 169백만원을 지원하여 닭의 형질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도계장 및 가공·유통시설의 정비 등 유통구조 개선

도계장의 시설정비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통합 정비하여 현재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육가공장, 계열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브랜드·부분육 유통을 주도하는 등 새로운 유통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3) 양계산물 규격거래 및 브랜드화 추세

계란은 6개 등급(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으로 구분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대란이상은 일반소비자, 중란이하는 가공공장과 요식업소에서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제품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포장형태의 브랜드제품이 생산·거래되고 있다.

마. 축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1) 축산물종합처리장의 활성화 추진

축산물 완전시장개방 체제하에서 낙후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육류유통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1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9개소(기존 2개소 포함)를 건설목표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돼지를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고품질 육류를 공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LPC 1개소당 처리능력은 1일 소 50~100두, 돼지 750~2,000두 규모로서 지금까지 8개소를 완공하였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다. 2001년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건설이 완료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육류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위생적인 생산·공급이 확대되어 냉장·부분육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식육판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소매유통구조 개선

LPC, 브랜드업체,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직판장 및 가맹점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식육점을 위한 시설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육점을 정예화·현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도매단계에서 소매단계까지의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거래기록 유지 의무제를 도입하여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3) 가격차별화 유도 및 물류표준화 기반 구축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냉장부분육 유통활성화를 위한 도매유통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선호부위와 비인기 부위의 수급안정과 가격차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쇠고기 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지역은 대도시 위주의 19개 지역에서 2000.7.1부터는 79개 지역거점으로 확대하여 지방에서도 고급육에 대한 가격차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도록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에 제비용과 적정마진을 고려한 소비자권장가격을 산정 공개하고 있으며, 유전자를 이용한 육류감별법을 조기 개발하여 적용하고, 축산물 명예감시원제도 등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국내 부존조사료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2004년까지 6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1)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신규 초지조성이 어려우므로 기성초지를 보완하거나 답리작, 사료포 등 사료작물재배에 중점지원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용수원 개발, 목로개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생산기반을 개선하였다.

조사료 생산확대·이용을 위해 사료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벧짚 수거용 기계보급과 벧짚의 암모니아 처리이용으로 사료 영양가치를 증진시켜 벧짚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조사료 생산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위해 대농가 교육·홍보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조사료 생산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등

축산농가가 농산 부산물 및 곡물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쇄기 및 배합기 구입비를 2000년 64농가에 32억원, 2001년 73개 농가에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하는 섬유질사료제조 시설에도 2000년 4개소, 2001년 6개소를 지원하는 등 자가배합사료의 이용 증대를 도모하였다.

사.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농업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에 가축분뇨의 액비화·퇴비화 등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2000년에는 3천개소에 562억원을 지원하였다.

(2) 축산분뇨처리 표준설계도 제작 보급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종류가 다양해 농가의 선택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98년까지 축종별·규모별로 가축분뇨 적정처리모델 30개를 설정하였으며, '99년에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8종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축산분뇨시설의 건실한 시공과 더불어 축산 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촉진해 나가고 있다.

(3) 수분조절제 수급안정 및 축분퇴비 수요 확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소요되는 수분조절재인 톱밥의 가격상승으로 축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톱밥공급을 확대하고 수분조절제 절약형 처리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축분퇴비의 품질향상과 수요확대를 위하여 농·축협에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4)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량 기준 설정, 작물별·계절별로 축분퇴비·액비의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체계의 강화

(1) 축산물 위생수준의 획기적인 향상

식육중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대상을 확대(잔류물질 : '99년 44종 → 2000년 45종)하여 위생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운영요령(SSOP)의 도입·적용으로 축산물 생산·유통시 생산자중심의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도축·가공·유통단계에 일관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본격 시행하여 도축장·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위해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유통중인 위해축산물에 대해 회수제도(Recall system)를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 구제역 청정국 지위 조기획득 및 지속유지

2000.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파주 등 6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범국가차원의 방역 실시 및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여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 가능성이 높은 '01.2.24~4.30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국내방역은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하고 국경검역은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구제역은 재발되지 않았다.

구제역 예방접종 완료('00.8월말) 후 1년 동안 구제역 재발이 없어 청정국 인증요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청정국 인증 신청(8.27)을 하였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9.17~21)”는 우리나라의 방역조치 사항 등을 높게 평가하여 총회의 승인 없이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9.19)하였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8개월 앞당겨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OIE총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최초의 국가로 평가되었다.

앞으로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 지속유지 및 기타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국경검역강화는 물론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농장예찰, 사육가축의 혈청검사 등 방역사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등 국내 축산물의 수출 재개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돼지콜레라 근절시책 추진

2002년 돼지콜레라 청정국 선언을 목표로 강도높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으로 예방주사 100% 실시 추진 및 농장채혈·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중지전 야외 바이러스 존재 확인 차원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01.6~10월)”을 실시한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신생 자돈을 사육한 시험농장내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음이 확인되어 야외 바이러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련기관과 농가 등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및 돼지콜레라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미실시농가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을 강화하고 민간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2001년에 4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정화 대책 추진 결과 돼지콜레라 발생이 '99. 8월 용인에서 마지막 발생후 2001. 11월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 상태이며, 면역형성율이 '98년 76.1% 수준에서 2000년 96.1%, 2001년 9월 현재 96.8%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예방접종 중단 및 청정화 선언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앞으로도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위해 예방접종 중단 및 혈청검사 강화 등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여 2002년 돼지콜레라 청정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4. 임업

가.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 조성

(1) 조림대상지역을 산지 위주에서 생활권 주변으로 확대

2030년까지 인공식재림 240만ha 조성 목표로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활엽수 등 소득수종 조림과 풍치경관 조림을 추진하되 산지에는 산주의 소득증대 및 목재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밤나무, 잣나무, 고로쇠나무 등 경제수를 14천ha 식재하고, 생활권 주변에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향토숲, 꽃나무벨트 조성 등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경관조림 3천ha를 식재한다.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및 생명존중의식을 배양하고 도시내의 녹지공간 확대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50개 초·중·고교에 시범적으로 학교 숲을 조성하여 산림환경 학습장으로 활용케 된다.

국민들에게 나무와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무심기에 대한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1. 2. 27부터 3. 20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2001년 「내나무갓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신청자 56천명에게 239천그루의 나무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1,194명에게 나무심을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2) 조림사업 활성화 및 우량종묘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국고보조 조림의 경우에는 묘목을 현물로 산주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의 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금년에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경제수와 유실수에 한하여 「묘목대 현금보조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2000년도까지는 묘목생산자금 용자범위가 지정묘목 생산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간이온실 시설 등 양묘장시설비와 경운기·트랙터 등 장비구입까지 확대하므로서 우량묘목 생산에 기여하게 하였다.

EU 및 OECD 회원 국가의 경우 「산림용 종자는 반드시 원산지가 증명된 것만 사용토록 하고, 묘목에 대해서도 종자의 출처가 분명한 것에서 생산되고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것만 사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양묘용 종자’는 반드시 종자검사에 합격된 종자를 사용하고 ‘묘목’도 묘목검사를 하여 합격된 묘목을 조림용으로 사용하되 이동경로를 명확하게 하는 등 「국제규범」에 맞는 종자 및 묘목의 원산지 증명체제를 구축토록 하였다.

(3) 소나무·참나무 집중 육성권역 설정

우리나라 자생수종중 고유 향토수종으로 우리 민족의 기상과 기초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소나무·참나무를 우리나라 대표수종으로 집중 육성하여 임목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육성방향은 우량소나무·참나무 임지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임도 등 임업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력 등 임지 생산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숲가꾸기사업 집중실시 및 산림경영기반시설을 확충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궁 등 중요 목재 문화재 복원에 소요되는 소나무 등 특수용재 보속생산,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4) 숲가꾸기사업 지속적 추진

금년에도 전국 800개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3천명, 연인원 3,130천명을 고용하여 79천ha의 숲을 가꾸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태적·기술적 숲가꾸기 정책을 위해 고속도로변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숲가꾸기사업을 밤나무 간벌 등 산주 소득증대와 연계 추진한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일반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술교육 이수자의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자활영립단」을 구성하고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5) 숲가꾸기 산물 수집·활용체제 확립

숲가꾸기 산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산물 집재기, 톱밥제조기 등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변, 마을 및 논·밭두렁 주변 등 산불취약지의 산림내에 있는 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표고자목, 펄프재, 톱밥, 조사료로 공급하므로서 외재 수입 절감 및 환경농업을 실천할 계획이다.

(6) 산림자원관리 기반조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할 목적으로 임내(林內)에 시설하는 임도는 과거에는 단순히 임산물을 운반하는 운반로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임산물의 운반 뿐만 아니라, 조림·육림·임목생산 등 산림작업을 기계화하고 원목 등 각종 임산물의 수송을 원활히 하며,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오지 산림의 개발과 이용이 불가능했던 유익자원의 활용을 높일수 있는 등 산림경영을 성력화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하는 임업경영에 있어서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또한, 농산촌의 단위마을간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익성 임간도로이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를 확대 시설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는 총 사업비 37,585백만원을 투자하여 361km를 시설하였고, 2001년에는 총51,451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394km와 지금까지 시설된 임도의 개선을 위해 구조개량

1,057km, 유지보수 2,514km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말까지 시설된 임도의 거리는 총14,793km로서 ha당 임도 밀도는 2.3m에 이르나, 일본 5m/ha, 미국 10m/ha, 독일 40m/ha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의 73%가 3명급 이하로 한창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나 농산촌 노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임업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산비용의 절감, 생산성의 향상 등을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필수적이다.

'95년도에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7년도에는 「제4차 산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임업기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운영주체 육성, 임업기계 작업시스템 개발, 임업기계화 연찬회, 실연회 개최 등 기반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농업기술개발사업 및 자체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트럭, 트랙터, 굴삭기 등 타용도 장비 부착형 기계장비 22종을 개발하였고 현재 2종을 개발 중에 있다. 아울러 산주들에게 싼 가격으로 임업기계장비를 대여하고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10개소의 임업기계지원센타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에 임업기계지원센타를 설치하였다. 또한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국유림을 대상으로 5개 지방산림관리청별로 1개소씩 임업기계화시범단지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품목을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임업용 기계장비 15종에 대한 석유류 면세에 대하여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업기계화를 촉진하여 2000년까지 29,417대가 보급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 확대하여 노동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의 절감 및 중노동으로부터 해방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나. 임업경영기반 확충

(1) 사유림 경영 활성화

전체 산림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는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진흥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최종수확까지 50년 이상 소요되는 산림투자의 장기성·저수익성 및 소유규모의 영세성 등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산주의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에서도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산림분야 투자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산림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영세한 산주에게는 임지규모화를 통하여 임업경쟁력을 갖도록 협업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협업경영은 자발적으로 임지를 집단화하고 단지화된 공동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단지내에서는 시설, 생산, 시업, 판매활동을 모두 공동협업으로 하기 위하여 2000년 말 현재 247개 협업체가 조직되어 있다.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협업지도원 85명을 배치하여 인건비 80%, 운영비 100% 및 산림사업비(자부담비의 30%)를 지원하였으며, 협업체 공동 소득사업으로 35개소에 28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기자본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조합 등 대리 경영체가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 실행해 주는 대리경영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103천ha의 사유림에 대하여 산림조합과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다. 앞으로 대리경영을 확대하여 부재산주 산림등 방치되고 있는 산림의 계획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림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독립가·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유림경영의 핵심선도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독립가는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임지규모를 가졌거나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1명을 선정하여 현재 총 362명이 선정되어 있다. 임업 후계자는 임업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임업경영의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2000년 195명이 선정되어 현재 총 906명이 선정되어 있다. 독립가·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산림경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행정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사유림의 경영주체 육성과 함께 기술보급·경영지도 등 기술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국내외 선진임업기술·지식·정보의 보급과 현장위주 경영지도로 산주의 산림경영지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산림조합에 임업기술지도원을 배치하여 임업기술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산림조합에 배치되어 있는 임업기술지도원은 총 787명으로서 임업기술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지도원 인건비,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단기소득임산물 개발·지원

다양한 임산자원의 소득화 촉진과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소득 품목인 밤·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매년 89백만\$ 정도를 수출하는 밤의 경우는 우수품종 개발 보급, 노령목 갱신, 병해충 방제 및 방제장비 지원, 작업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표고의 생산체계를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표고자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 및 별채구역 지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관상자원과 산약초·약용수종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로 우리 토종식물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확대와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지원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임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이면서도 세계9위의 임산물 수입국으로서 연간 24백만m³(원목7백만m³)의 목재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150만m³의 국산재를 재질과 특성·용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국내 목제품 공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목재가공 산업의 생산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자동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간벌·소경재 등 국산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목제품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하여 목탄·목초액, 통나무가공, 제재목, 칩 등 33개 목재가공 시설에 대한 신·증설 및 노후시설 교체 등 현대화·자동화 시설지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국산재 대량 수요처이면서 폐목재 재활용으로 21C 환경 친화적 목제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MDF, PB 등 보드류 제품을 생산하는 각 시설개체와 공정의 자동화 시설에 대한 시설자금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건설·가구산업의 경기위축으로 재고 누적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가공 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원목 구입자금 13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농산물의 증수 및 품질향상, 병해충 발생억제, 토양개량 등에 효과가 인정되어 국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목탄·목초액 산업육성을 위하여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한 바 있으며, 친환경 농자재로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신규 시설자금 지원확대와 각종 농작물에 미치는 성능효과에 대한 연구용역과 산업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밤, 표고 등 식용임산물의 가공산업 육성과 축산 폐수정화용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시설자금 등 관련산업에 육성지원 할 계획이다.

(4) 산촌종합개발

우리 나라 국토면적의 46%, 산림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산촌은 지역주민의 정주공간으로서 농림업의 생산기반이며,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핵심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촌은 그 동안 국토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되었으며,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의 과소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산촌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요청되었으며 산림청에서는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낙후된 산촌지역을 산림경영과 임업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육성함으로써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국민(특히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보건 휴양 및 녹색관광의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95년부터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끝나는 2007년까지 240개 마을 개발을 목표로 2001년 현재까지 25개 마을을 개발 완료하고 51개 마을은 개발 조성 중에 있다.

주요사업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의 신·개축,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시설, 마을회관, 마을안길 정비 등의 정주기반조성과 소득원 개발을 위한 공동저장·판매, 가공·이용시설, 산나물, 산지과수, 관상수재배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산촌 지역의 산림 및 휴양·문화자원을 체험하려는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각종 이벤트 개최, 직거래장터 개설,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력있는 산촌마을 이미지 조성을 위한 지역 전통 생활양식의 복원 및 휴양시설 설치 등 녹색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5) 임업전문인력 양성

농산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여 임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84년부터 임업기능인 양성사업이 착수되었으며,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기술, 임업기계, 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07년까지 850개단 1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2000년까지 435개단 5,157명의 임업기능인 영립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0단 360명을 신규조직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매년 신설 민유림 영립단에 대하여는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7종 1,586점(56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임업기능인양성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산림경영을 주도적으로 지도할 현장 임업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강릉 임업기계훈련원에서 3개월 교육과정의 산림경영자교육을 실시하여 2000년까지 273명을 양성하였으며, 금년에도 150명을 양성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6) 산림 복합경영 육성 및 지원

산림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이나, 임업은 목재생산의 장기성·저 수익성과 산림의 소유 규모가 영세하여 산업기반으로서는 어려운 여

건에 놓여 있으므로 목재 중심적 산림경영의 한계성을 보완하여, 다양한 임산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금년에도 20개소에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복합경영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모니터링하여 이론·정책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7) 산림 휴양시설의 확충

'80년대에 들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산업화의 심화 등으로 일반국민의 야외휴양수요가 급증하자 이들 수요를 산림에서 흡수하기 위해 '89년부터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91년 815천명에 불과하던 전국 휴양림 이용자 수가 2000년도에는 3,798천명으로 무려 4.7배 증가하였다. 산림휴양시설도 대폭 확충되어 자연휴양림의 경우 2001년도 현재 전국 90개소가 조성·운영중에 있으며, 17개소가 조성중에 있다.

산림휴양시설과 함께 자연휴양림의 고유 이미지 확보를 위한 이미지 통합사업(C·I)을 완료하고, 산림휴양공간을 체험·교육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자연학습 및 산림체험코스 시설의 설치를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중에 있다.

또한, 기존 휴양시설의 보완을 통한 산림휴양서비스를 개선하고 내실화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휴양시설·운영관리를 지역 산촌사회의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다.

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2000. 9. 29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산지의 보존 및 이용 관련규제 개선대책」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분별한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자연 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보전임지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준보전임지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있으나 법령체계와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고 있으나, 산림형질변경 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토사유출·산사태 우려가 있어도 이를 방지하는 제도가 미비되어 있어 산림보전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나, 전용타당성의 현지검증 없이 정해진 서류만 제출하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관훼손 및 난개발(亂開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산지전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산지전용 허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전임지전용허가·전용협의·산림형질변경허가·수목굴취허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구적인 전용은 산지전용허가로 통합하고, 지목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형질변경 후 복구하는 경우에는 산지사용허가로 운영함으로써 복잡한 4가지 인·허가를 단순·명료화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고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지전용 허가전에 생태계보전, 경관보호, 토질·경사 등 재해위험도, 산림상태에 관한 산지전용타당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연구용역결과를 제도화하여 전용타당성 기준에 따라 직접 현지조사·평가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개발방지,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 및 경관보전 등 난개발 방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셋째,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국토 난개발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국토난개발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제도를 보완할 경우 현행 산림법으로는 체계적인 개정이 어렵고 타 법률에 의한 관련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산지전용에 따른 개선이 어려우므로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지관리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산지관리법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2001.7.6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하여 금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라. 임업기술 개발·보급

목재소비량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폐목재류의 재활용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폐목재 리사이클 이용은 환경보전과 자원의 유효이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임업연구원에서는 목질폐기물을 재활용한 각종 건축자재 개발연구를 추진하여 목질·시멘트블럭이 개발되었다. 목질·시멘트블럭은 목재와 시멘트의 장점이 결합되어 일반 건축용 시멘트블럭 보다 가볍고 내충격성이 훨씬 뛰어나며, 자연 친화적인 목재의 성질을 나타내므로 야외용 블럭, 인테리어용 및 건축용 벽돌 등 다양한 용도에 쓰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재에 대한 국내수요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수출액은 1992년 8만불에서 현재 110만불로서 13배 이상의 증가추세에 있어 분재수출 요건인 고품질화, 규격화, 대량생산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화 공정육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용 고품질 분재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 및 수출위주의 기업 영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송이생산량은 1985년 1,313톤이 생산된 이후 매년 약 7%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송이 환경개선 사업'의 시업기준 제시 및 송이산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버섯 지표종 선발 및 토양의 탈수소효소를 이용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현재는 송이의 인공재배를 위한 기반 기술을 확립하고자 6년간(2000~2006) 농림부가 기획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임산인피섬유를 이용한 전통한지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업체가 영세하여 업체 스스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활용범위가 넓은 고부가가치의 한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 표면마감재용 한지 모양지 개발기술에 성공하였다. 표면마감용 종이를 대체 소재로 한지를 개발 할 경우 한지업체의 고 부가가치의 기술축적 및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농·산촌 단기임산소득 증대를 위해 경제성이 높은 호도나무 우량품종 왕호도 등 4품종을 1998년도에 신품종 선발육종하여 현재 농가에 보급 중에 있으며, 또한 병해충에 강하고 재배하기가 용이한 은행나무의 신품종 육성을 위해 임업연구원에서는 1996년부터 5년간 전국 8개도 33시·군에서 수확량이 많고 병해충 피해가 없는 건전목을 대상으로 우량개체 후보목 202본을 선발하였다. 최종 선발된 우량개체들은 접목증식하여 클론 검정중에 있어서 금후 클론 검정후 신품종으로 명명하여 연차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 해외 임업협력 증진

(1) 자원협력 강화

목재수급안정은 국가경제 발전과 직결되나 국내 목재자원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목재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요 산림자

원보유국인 호주, 인니 등 7개 국가와 임업협력협정 또는 임업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양자간 임업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가변적인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예상되는 목재도입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6개국에 조립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을 확보해 오고 있다.

2001.3.20 호주 농림수산부에서 개최된 제2차 한·호주 임업협력위원회에서 호주 투자정보 제공, 침엽수 합판제조 기술 연구협력, 무역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키로 하였고, 2001.7.10 인니 임업부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인니 임업위원회에서는 인공조립투자 의향서를 교환하였고, 남부 칼리만탄 생태관광 시범사업 참여 등에 합의하였으며, 2001.10.25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2차 한·뉴 임업협력위원회에서는 뉴질랜드 목재 가공분야 투자정보제공, 얇은 침엽수 합판 제조기술 연구협력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목재 공급원 확보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해외조림사업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인 조립면적 확대를 위하여 지원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00 : 67억원 → '01 : 122억원)하고, 조림사업비 이외에 해외조림지에 대한 육림비를 지원하고, 용자비율도 조림사업비의 10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용자기간도 수종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진출업체 또는 진출희망업체가 투자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또한, 해외조림 진출희망업체들의 투자정보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 브라질 등 10개국에 대한 해외조림 수익성을 분석하여 업체에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목생장 여건이 좋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및 대양주를 대상으로 투자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진출희망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2) 임산물 수출·입

임산물 수출은 합판산업을 중심으로 한 때 국가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90년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주요 수출경쟁국인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임산물의 수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품질 향상, 우리 상품의 우수성 홍보, 신규시장 개척 및 유망 수출품목의 발굴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임산물 수출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시책과 수출업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98년에 241백만\$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하여 '99년에는 263백만\$, '00년도에는 255백만\$를 기록하였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7.6% 증가된 3억\$로 수출목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기침체 및 송이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업계와의 공동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수출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00년을 기준으로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대만등 상위 5개국에 전체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밤, 송이, 표고등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대일 의존도는 90%에 달하고 있어 타 농축산물의 대일수출비중 41%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품목에 있어서도 밤, 합판, 송이, 섬유판, 목재케이스, 제재목 등 상위 6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장다변화와 품목확대를 위해 '99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력아래 해외시장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업계에 제공하고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주요내용을 최신정보로 수정 갱신할 예정이다. 그리고 영세한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포장·운송비, 포장기계장비·운송차량, 선별기 구매비지원과 해외 시장개척사업등에 올해

58억원('99:48억원, '00:5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물류비의 경우 수출유망품목인 분재를 신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신규시장을 개척하거나 유리한 가격으로 수출을 늘릴 경우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출촉진자금지원이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영세한 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갖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수출에 대한 자신감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99년 이후 매년 2개지역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올해도 2회(네덜란드·독일, 일본지역)실시하였으며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한·일 밤 간담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한편,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용 원료구매자금으로서 올해 지난해보다 2.6%증가된 433억원(밤303, 송이85, 표고45억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업체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확대 간담회 개최, 품목별 수출담당관제 운영, 수출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밤 수출업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인 현지 검역관을 공주, 부여등 밤 주산단지로 초빙하여 현지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IMF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임산물 수입은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수입이 증가되었으나 올해는 국내의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수입액 1,667백만\$보다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목 및 합판용 단판 등은 중간재, 원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합판등 가공품에 대해서는 국내 기반이 유지·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합판, 표고버섯에 대해 계속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국내시장 교란우려가 있는 밤, 잣, 대추등의 북한산 물품의 반입을 계속 제한할 계획이고, 국내시장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등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5. 수산업

가. 연근해어업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업은 최근들어 어업자원의 감소, 주변국가의 EEZ선포, 해양오염 심화 등 주변의 어업환경 변화와 IMF의 영향으로 인한 어업경비의 증가로 대부분 어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업환경변화에 맞도록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보완발전 시키는 등 개혁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사업을 국정 100대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안어업은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역실정과 어업자원 수준에 맞게 허가정수 조정 등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근해어업은 EEZ확정시 영향이 크거나 어업경쟁력이 저하된 대형선망, 대형트롤, 대형기저(외끌이,쌍끌이),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채낚기, 근해안강망, 근해유자망 등 8개 업종을 위주로 우선 감척해 나가고 또한 경쟁력이 열위인 업종에 대하여도 감척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이와 별도로 유사업종 통폐합 등 어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자율관리 어업정착 등 어업자원관리를 강화하여 연근해 어업 자원을 보전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99.9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영향받는 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연안낭장망, 연안안강망 등 연안어업의 감척은 실시하지 않고, 동 협정과 관련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 '99~2000년까지 총 685척을 감척하였으며,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련 영향이 없는 어선은 “일반감척사업”으로 근해안강망(212척) 등을 감척하였다.

2001년도에는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한·중어업협정 관련, 530척과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17척 등 총 547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감척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반감척 사업으로 연안어선 88척과 근해어선 43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2) 주변수역 자원보호 및 관리강화

UN해양법 발효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EEZ선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EEZ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 '97.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자원전문가 협의회 구성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2000년까지 4,701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52천ha를 시설하였고, 2001년에도 294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7천ha를 시설중에 있으며, '94년부터 대단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7개소 시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2000년까지 6개소를 준공하고 2001년 현재 1개소는 공사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어장 자원조성의 가속화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한 전복·대하 등 수산종묘 30백만마리를 매입하여 연안어장에 방류중에 있다.

불법어업 근절로 어업질서를 조기 정착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검찰, 경찰, 해경, 시도, 수협 등 관계부처와 공조체제를 구축, 불법어업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상습·고질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벌금 상향조정, 구속수사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불법어선에 대하여 '98년까지 247억원을 지원 2,558척을 합법어업으로 전업 조치하였고, '99년에도 33억원(330여척)을 지원하고 있는 등 불법어업 조절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3) 어로시설의 현대화

2000년에는 연근해어선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조업을 위하여 노후어선, 기관대체 및 어선장비·설비개량 등에 105억원을 지원하여, 16~21년 이상의 노후어선 1,036톤을 대체 건조하고 연료과다소모형 저효율 기관 16천마력과 노후된 어선 56척의 장비·설비를 개량하였으며, 어선용 기계 709대를 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고로 지원하였다.

나. 해면양식어업

해면양식어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의 재편에 따라 원양 및 연근해 어선어업의 생산여건 악화로 감산이 예상되는 수산물을 양식어업 육성을 통하여 보전 생산하고자 2000년에 이어 새로운 양식어장을 확대개발하고 양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생산 기반 조성 및 양식어업 경영안정에 주력하였다.

2001년에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양식어장 개발에 총 246억원을 지원하여 환경과 관광 등이 연계된 대형양식단지 4개소를 조성하고, 어류양식장 10개소와 내파성가두리양식장 4개소, 전북·가리비 등 고소득 양식어장 40ha를 새로이 개발하여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205ha의 마을어장을 생산성이 높은 양식어장으로 개발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지선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또한, 양식기반 시설확충을 통한 양식어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양식어업 기반시설에 77억원을 지원하여 어·패류 종묘생산 시설 10개소, 사료저장시설 10개소, 개량부자 305천개, 야간점등부자 3천개 등을 지원중이다.

그리고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연 1회 이상 전 어업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리 어업권을 정비하고, 새로

은 양식품종 및 기술 보급과 어장의 단위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어촌에 상주하고 있는 수산기술관리공무원을 활용, 적정시설 지도와 함께 어장에 참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양식어장 평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점차 악화되고 있는 어장환경을 개선·보전하기 위하여 187억 원을 지원하여 13천ha의 연안어장과 3개소의 특별관리 어장에 대한 어장바 닥같이, 오·폐물수거 등 어장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 내수면양식어업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의해 가두리양식장 철거 등 내수면 어업입지약 화에 따른 어업인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담수어 집약생산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지역특산어종 개발 등 양어장 시설지원을 위해 대단위 담수어양식단지조성 및 담수어양어장 시설을 2000년도에 2,100백만원(11개소) 지원에 이어 2001년도에 는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 및 담수어 양식장 시설 등 3,400백만원(7개소) 을 확보하여 지원하므로서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 도모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라. 원양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공 해조업 규제조치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과 베링공해, 북대서양수산기구 (NAFO)수역 등의 주요어장이 상실되고,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 서는 원양정책자금을 2001년에 4,460억원(영어자금 1,150, 생산자금 3,310)을 지

원하고 있으며, 정부간 어업협정을 통해 양자간 어업협력관계를 유지 해 오고 있는 연안국들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자원을 보유한 기니아, 세이셸 국가등과도 새로운 어업협력을 통하여 해외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입어대상국 등을 대상으로 현지투자·합작 등 상호 호혜적 입어를 적극 추진하여 장기적인 해외어장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주요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강화로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어업규제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원양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99년도에는 북해도 트롤어선 6척, 2000년에는 꽁치 봉수망 4척을 감척 완료하였으며, 2001년에 꽁치봉수망 어선 3척을 감척하고자 35억을 확보하여 감척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꽁치봉수망 3척(35억원), 오징어 채낚기 2척(26억원) 을 감척하고자 예산 61억을 확보하였다.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다양한 소득원 개발

가.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농촌지역에 농외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높여주고,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1984년부터 농공단지 조성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12월말까지 총 295개소의 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이중 286개소의 농공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었고,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에 3,343개의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며, 105천명이 취업(현지인 69천명)하여 연간 11,972억원('00년 기준)의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은 고용증대와 생활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외에 단지 조성 공사와 공장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촉진, 지역연고 기업의 투자활성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 농공단지 조성실적 >

구 분	합 계	'97년 까지	'98년	'99년	'00~2004년
단 지 수(개소)	299	291	3	1	4
연 면 적(천평)	13,436	12,995	294	103	44

나. 농촌휴양자원개발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농원은 '84년, 휴양단지는 '89년, 민박마을은 '9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84년부터 2000년말까지 국고용자 1,649억원을 지원하여 645개소(관광농원 370, 휴양단지 9, 민박마을 266)를 조성하였으며, 2001년에는 16억원을 지원하여 10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고 있다.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의 2000년 한해동안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관광농원 등에 다녀간 내방객이 425만명(관광농원 350만명, 휴양단지 30만명, 민박마을 45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도·농교류의 매개체로서 역할과 인근지역의 농특산물 판매확대 등 농촌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다. 한계농지 개발 추진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지역여건을 감안, 다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94.12월 농어촌정비법을 제정. '95. 6월에 시행함으로써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99년말까지 4개소를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1개소(계속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라. 어촌관광 개발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의 소득원 개발, 어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90~'96년까지 67개소에 35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98년부터는 안정적인 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개소당 30억원씩 2개년사업으로 투자하는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남 보성군, 해남군, 신안군, 충남 당진군에 60억원을 국고융자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다.

또한, '98년부터는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4년까지 7개지역에 개소당 60억원씩 3개년사업으로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까지 전남 완도(60억원), 경남 거제(60억원), 강원 삼척(60억원) 등 3개지역에 국비 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 ~2004년 까지 4개지역에 240억원(국고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업인·어촌을 활성화하고 어촌관광산업화를 위한 모델개발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어업활동의 장(場)인 어촌을 어로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등 체험관광어촌으로 개발하여 21C관광어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준비중에 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자원, 산업생산과 연계하여 도시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착문화적, 환경친화적 관광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57개마을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독창성이 있는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1개마을당 5억원을 투자하여 체험어장, 진입도로, 주차장, 휴게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관광어촌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마. 어업의 소득원개발 지원

어업의 소득원개발사업은 그동안 산업화에 따른 바다의 매립, 간척과 연안어장 오염진전 등으로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국제적인 자원의 자국화정책 등 어려운 수산업의 여건으로 어가소득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농가소득 대비 '00년도 82%수준)

어촌경제를 활성화시켜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1994년부터 관광·부업시설, 복지시설 등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99년까지 497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유람선, 체험어장, 특산물전시관 등 10여종의 어촌부업·복지시설을 140개소 지원완료 하였으며, '00년에는 60억원을 투입하여 24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현대적 생활환경을 갖춘 문화마을 조성

면 지역의 중심마을에 마을기반시설, 주택신축, 복지·문화 및 환경보전시설 등을 갖추어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가면서 생산기반, 유통, 가공시설사업과도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91년부터 '00년까지 137개 지구를 착수하여 104개 지구를 완료하고, 2001년에는 616억원을 들여 16개 지구를 신규로 착수하여 11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10년간 4조원 지원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정주기반조성을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4조원을 지원하여 매년 25천호씩 25만호를 개량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00년까지 17,610억원을 지원하여 105,575동을 개량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700억원을 지원하여 8,500동의 주택개량을 추진중에 있다. '98년부터 IMF 영향으로 인한 정부예산 지원의 감소로 당초 계획된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어촌주택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소요액	'95까지	'96	'97	'98	'99	2000	2001	2002이후
농어촌주택개량 (농특세)	40,000 (8,000)	4,000 (1,200)	4,000 (800)	4,000 (800)	2,020 (680)	2,040 (408)	1,550 (388)	1,700 (360)	16,690 (3,364)

다.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추진

지방양여금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제정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94년 7월 ~ 2004년 6월말까지 10년간 농어촌지역에 투자되는 농어촌특별세 총 15조원 중 1조 2천억원을 농어촌도로에 투자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당초 2004년까지 4조 2,210억원(지방양여금 2조 630억원, 지방비 1조 4,210)억원을 투자, 17,168km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여 포장률을 '00년말 29.4%에서 2004년까지 45% 수준으로 신장할 계획이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94~2004년)>

사업명	합계	'94~'98	'99	'00	2001	2002~2004
사업량(km)	17,168	5,515	517	599	827	9,711
사업비(억원)	44,210	17,185	3,580	4,223	5,793	13,429

※ 재원별(억원) : 농특세 1조 2,000억원, 양여금 2조 630억원, 지방비 1조 1,580억원

라.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

상수원 오염과 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도 도시지역 주민과 같이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94~2004)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면지역 자연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여 '00년까지 총 4,655억원을 투자하여 2,871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816억원을 투자하여 480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하여 총 5,000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00년까지 총 1,412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6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총 332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13개소를 포함하여 52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하여 215개 사업을 추진,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5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마.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농어촌의 생활하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95~'00년까지 1,141개 마을에 2,165억원을 지원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2001년에는 657억원을 지원하여 270개 마을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95~'00년까지 오염소하천 312km를 정비하였으며, 2001년에는 349억원을 투입하여 80km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대 등으로 광역매립지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을 연계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95~2004)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는 신규사업으로 19개사업을 추가하는 등 2004년까지 총 2,040억 원을 투자하여 79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소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8년부터 '00년까지 532억원을 투자하여 84개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바 있고, 2001년에는 38억원을 투자하여 4개소(중설 포함)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종합대책('96~2005)에 따라 2개소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상수원 및 하천주변에 밀집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91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0년까지 2,868억 원을 투자하여 32개소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12개시설이 공사·개선중에 있다.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처리률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소·인 제거설치, 공법개선, 저류조·유량조정조 확대 등 시설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특세 생활여건 개선분야 사업내용>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관부처	총 소요액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획	2002 이후	개발목표
○농어촌도로	행정자치부	12,000	650	1,200	1,200	1,000	840	759	1,089	1,839	3,423	○농어촌도로 17,168km확포장
○농어촌주택	행정자치부	8,000	400	800	800	800	680	408	388	360	3,364	○농어촌주택 25만호개발
○농촌생활용수		12,000	265	1,000	1,000	1,000	906	948	960	1,148	4,773	
- 암반지하수	농림부	8,000	130	800	800	800	680	722	722	816	2,530	암반관정 5,000개소 개발
- 지방상수도	환경부	4,000	135	200	200	200	226	226	238	332	2,243	면지역 215개소 설치
○농어촌하수처리사업		8,100	-	800	750	700	560	506	726	1,225	2,833	
- 마을하수도정비	행정자치부	5,000	-	450	413	375	291	247	389	657	2,178	농어촌마을 2,500개 정비
- 면단위하수도정비	환경부	1,100	-	150	137	125	97	83	130	219	159	
- 오염소하천정비	행정자치부	2,000	-	200	200	200	172	176	207	349	496	농어촌소하천 1,000km정비
○농어촌폐기물종합 처리시설비지원	환경부	2,040	-	225	225	225	150	150	150	195	720	○79개소 (시·군당 1개소)
계		42,140	1,315	4,025	3,975	3,725	3,136	2,771	3,313	4,767	15,113	

※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총예산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포함

※ 지방비 제외 (국비중 양여금 포함)

3. 교육여건 개선

가. 농어촌학생 대학입학기회 확대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실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 및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촌 대책의 일환으로, '96년도부터 도입·시행된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제도는 농어민의 이농현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대학입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및 수도권 대학 정원의 5% 확대가 필요하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을 '97년에 입학정원의 3%(중전 2%)로 확대하였고, 대상 범위를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생은 물론 재학중 행정구역이 개편으로 동지역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96~'01년까지 등록자 : 85,828명
- '02학년도 선발예정자 : 18,715명(일반대 10,149, 전문대 8,566)
- 337개 대학 : 일반 183개교, 전문 154개교

(2) 농어촌지역에 전문대학 설립

농어촌지역의 전문대학 설립요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고교를 개편, 8개 공립전문대학을 설립하여 개교하였다.

- '96년도 : 거창, 남해,
- '97년도 : 경도
- '98년도 : 강원 전문, 충북 과학, 청양, 담양,
- '99년도 : 남도전문대학

나. 농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1)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부모 및 조부모 등이 읍·면지역 및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중 실업계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에 의하여 1990~2000년까지 5,136억원(1,359천명)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508억원(78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핵심 농업인후계세대 육성, 자영농과생의 기숙사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 고취,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1986년도부터 지원하였으며, 1986~2000년까지 122억원(23천명)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0억원(2,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새마을장학금 지원

농업계고교 재학생 중 자영농과생 및 일반농과생 중 영농학생이나 4-H회원을 우선 선발,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79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61억원(52천명)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에는 2,500명에게 4억원(1인당 1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01년도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지원계획 >

구 분	실업계고생 학자금	자영농과생 급식비	새마을장학금
인 원	78천명	2,500명	2,500명
금 액	508억원	20억원	4억원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기존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과 병행하여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2,1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학기 당 150만원(중전 1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상환은 졸업 후 1년 거치,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균등상환 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까지 1,204억원(121천명) 지원하였으며, 2001년에는 15천명에 대하여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 농어촌 출신 학생 기숙사 건립

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 숙식비 절감, 면학분위기 조성과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1995년부터 각 도(道) 단위 1개소(9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건립규모는 연건평 2,000평 규모로 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관,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출신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도모하게 될 것이다.

2000년도까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소는 개원·운영 중에 있고, 제주는 2001년 상반기에 완공되었으며, 개소별 연건평 2,000평 수용인원 300명 기준으로 건립되었다. 경기 및 강원도는 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마.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농어촌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각종 문화 및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토록 하여 농어촌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1995~2004년까지 총 100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1995~2000년까지 46개관(400억원)을 건립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총 100억원의 장서구입비 지원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1995~2001년까지 60억원을 지원하였다.

2001년도에는 4개관 도서관에 건립비 각 10억원씩 40억원을 지원하고 도서관구입비로 179관에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농어업인 연금제도 실시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WTO체제출범 및 UR 등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통상압력 강화 등으로 농업인의 노후 생계보장과 노령 농어업인 등의 은퇴후 소득보장 제도로써 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94. 6월 농어업인 연금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95. 7.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시행 성과

농어업인연금제도는 '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1년 8월말 현재 가입자수는 203만명(농어업인 51, 비농어업인 86, 납부예외자 66) 으로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최저등급 보험료의 1/3(3,660원)을 매월 지급하고, 관리운영비 전액을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2004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연금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총소요액	'95	'96	'97	'98	'99	'00	'01이후
6,635	455	672	653	616	579	616	3,044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농어업인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자진납부 등의 연금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므로 특례노령 등에 대한 연금급여 혜택, 유족·장애연금 등의 연금수급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제도, 선납제도, 분기납제도 등의 납부편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월 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중이다.

5.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들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액 경감연령을 종전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건강검진 실시 및 급여기간 연장

농업인 등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험급여 확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세대주 및 40세 이상인 세대원에 대하여 '95년부터 당뇨, 고혈압, 간기능장애 등 성인병에 대해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98년 10월 1일부터 매 30일간의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액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보험급여기간을 '98년 300일에서 '99년 330일로 연장하였으며, 2000년에는 급여기간 제한없이 연중 급여를 받게 되었다.

(3)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 경감 확대

2000.12.14. 국민건강관리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지역가입자(농어민 포함) 15%, 직장가입자는 20%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농어민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면비율을 22%(중전 15%) 확대하여 실질적으로는 5.5% 인상토록하였다.

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1994~2004년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4,785억원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의료기관 보강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 881개소에 2,50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1년도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1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산간오지·벽지 등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의 진료기능강화 및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공중보건한의사제도 도입

농어촌지역에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8년도에 공중보건한의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에는 91명이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1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1년 12월 일 발 행

2001년 12월 일 인 쇄

발 행 : 대 한 민 국 정 부

편 집 : 농 림 부 농 업 정 책 과

인 쇄 : 한 라 인 쇄 ☎ 503-3011

<비 매 품>